

의정활동보고서

제172회 정례회 (2002. 9. 24 ~ 10. 4)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효채 행정부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72회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중임에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해현장을 찾아 수재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해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 시던 안동출신 윤상주 의원님께서 지난 9월 16일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 윤상주 의원님께서서는 3선의원으로서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의원 으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아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장례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국이 대 테러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국제유가인상 등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한 분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이 착공되면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관광수요의 증가, 물류비용의 절감 등 경제효과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작년도 결산심사와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대의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결산안에 대하여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지난해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회기동안 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부지런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9. 24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위원회활동사항

4. 기타사항

VI. 도정질문

VII. 5분자유발언

부 록

☐ 조례안

☐ 예결특위종합심사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72회 정례회는 2002년 9월 24일 개최하여 10월 4일까지 11일 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12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9월 2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회기결정의건, 2001회계년도경상북도및경상북도교육청결산검사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 도정에 관한 질문(우성호·박종욱·김기대의원)을 하고 9월25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양재경·손경찬·채희영·김성하의원)을 마치고 휴회 하였다.

회기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였다.

10월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이정백·김성하의원)을 청취한 후 2001회계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상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제172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정례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집회공고일 : 2002. 9. 13

라. 집 회 일 : 2002. 9. 24(화)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2. 9. 24 ~ 10. 4 (11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9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예결 특위
금회	12	1	1	2	2	1	2	1	2
누계	48	5	5	6	6	7	7	6	6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2. 9.24(화) 11:00	1. 제172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회계년도경상북도및경상북도교육청결산검사결과보고 3. 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10. 4(금)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3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9.24(화) 13:00	1. 제173회 임시회 회기협의 2.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의회사무처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9.26(목) 10:30	1.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 교육원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9.26(목)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소관 2.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9. 27(금)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자치행정국소관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	제2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9.26(목)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보건환경 연구원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9. 27(금)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심사 - 교육청소관	제1차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9.26(목)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9.26(목)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경제통상실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9. 27(금)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2.9.27(금) 11:00	1. 2001년도경상북도결산심사 -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2.9.30(월) 10:00	1.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 교육청소관 2.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 원, 경도대학소관	제 5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1(화) 10:00	1.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여성국, 건설도시국, 소방 본부, 의회사무처소관	제 6 차 원안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6 (22)	6 (22)	6 (21)	(1)				
조 례 안	소계	3 (10)	3 (10)	3 (10)					
	의 회 제 안								
	도지사 제 출	3 (8)	3 (8)	3 (8)					
	교육감 제 출								
예 산 · 결 산		2 (3)	2 (3)	2 (3)					
동 의 · 승 인		(3)	(3)	(3)					
건 의 안		(2)	(2)	(2)					
결 의 안		(2)	(2)	(2)					
기 타 안		1 (2)	1 (2)	1 (1)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6 (22)	6 (22)	3 (10)	2 (3)	(3)	(2)	(2)	1 (2)			
의회운영	(3)	(3)	(1)			(1)	(1)				
기 획	(1)	(1)			(1)						
행정사회	3 (5)	3 (5)	3 (5)								
교육환경	(2)	(2)	(2)								
농 수 산	(3)	(3)	(1)		(1)	(1)					
산업관광	(2)	(2)	(1)		(1)						
건설소방	(2)	(2)					(1)	(1)			
특 별	2 (3)	2 (3)		2 (3)							
본회의	1 (1)	1 (1)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	-	-	
누 계	-	-	-	-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2 (10)			(2)	(1)	(1)	(1)	(2)	1 (2)	1 (1)
의회운영										
기 획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2)					(1)		(1)		
농 수 산	1 (2)				(1)				1 (1)	
산업관광	(1)						(1)			
건설소방	1 (4)			(1)				(1)	(1)	1 (1)
특별위원회										

※ ()안은 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 (9)	2 (9)				1 (1)
의회운영						
기 획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2)	(2)				
농 수 산	1 (2)	1 (2)				
산업관광	(1)	(1)				
건설소방	1 (3)	1 (3)				1 (1)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02. 9. 13)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2. 9. 14)
경상북도지사 (2002. 9. 13)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	행정사회 (2002. 9. 14)
경상북도지사 (2002. 9. 13)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2. 9. 14)

2. 조례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2. 9. 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	2002. 9. 16
2002. 9. 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	2002. 9. 16
2002. 9. 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2002. 9. 16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농수산 위원회	2002. 9.13	김천시 일원	태풍 『루사』 의 영향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복구지원
건설소방 위원회	2002. 9. 9 ~ 9. 12	성주, 청송, 영양, 영덕, 울진군 일원	태풍 『루사』 피해지역 현지 확인

4. 기타사항

○ 해외시장 개척활동

- 일 시 : 2002. 9. 1 ~ 9. 13
- 장 소 : 터어키, 독일, 포르투갈, 카자흐스탄
- 참 석 : 최영욱 산업관광위원장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제박람회

- 일 시 : 2002. 9. 4 ~ 9. 9
- 장 소 : 프랑스 알자스주 스트라스부르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민주평통 제10기 경북지역회의

- 일 시 : 2002. 9. 10(화) 10: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도의원

○ 수해축산농가 방문 격려

- 일 시 : 2002. 9. 11(수)
- 장 소 : 상주시 청리면, 공검면
- 참 석 : 이정백 농수산위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6(화)
- 장 소 : 경주시 사회복지회관 (5개시설)
- 참 석 : 최원병 의장, 이상효, 이달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6(화)
- 장 소 : 포항모자원
- 참 석 : 손규삼, 이원만, 김순견, 이상천, 황복희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6(화)
- 장 소 : 영주시 십자정신요양원
- 참 석 : 박성만, 우성호, 장하숙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7(수)
- 장 소 : 칠곡군 상록모자원
- 참 석 : 권준택, 김주연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8(수)
- 장 소 : 김천시 중생원
- 참 석 : 김정기, 김응규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8(수)
- 장 소 : 안동시 성좌원, 경안신육원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장대진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8(수)
- 장 소 : 영천시 마야정신요양원
- 참 석 : 김준호, 이종철, 한혜련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8(수)
- 장 소 : 상주시 천봉산요양원
- 참 석 : 이정백, 박두필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8(수)
- 장 소 : 문경시 신망애육원
- 참 석 : 채희영, 김병진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8(수)
- 장 소 : 성주군 실로암육아원
- 참 석 : 김기대, 방대선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18(수)
- 장 소 : 예천군 연꽃마을
- 참 석 : 이현준, 정상진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2. 9. 20(금)
- 장 소 : 의성군 노인복지시설 한울
- 참 석 : 안순덕, 신영호 의원

○ 통일의 불과 새천년 영원의 불 합화식

- 일 시 : 2002. 9. 18(수) 18:00
- 장 소 :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 기념광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

VI. 도정질문

□ 제1차 본회의

우 성 호 의원(행정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도의원으로서의 경험도 일천하고 도정파악도 제대로 안 된 본 의원에게 이렇게 제7대 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막대한 수해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심신을 아끼지 않는 이의근 도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나라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자라나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도승희 교육감님 이하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선의원으로서 28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다는 커다란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제7대 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자로서 이 곳 도의회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이 제7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이 있는 날인만큼 2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위상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집행부를 대표하는 도지사과 도교육감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도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불참하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수 있음을 본의원도 알고 있으며 이 법조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이나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이 제7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에 불참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의원의 도정활동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별로 성의없는 내용으로 그나마 하루 늦은 9월17일까지 겨우 서면답변을 해왔습니다. 부득이 각 실·국·과를 찾아다니면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알찬 도정질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알찬 도정질문을 회피하자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본의원은 이번 도정질문 중 중점 질문사항인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지사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 부분의 답변은 내일 도지사 참석 하에 도지사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지사께 묻습니다.

첫째 대구·경북의 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여 경북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91년 대구와 경북은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확연하게 갈라졌습니다. 제각기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민선단체장을 뽑아 각자의 살림살이를 차렸습니다.

이처럼 대구와 경북이 법적, 제도적으로 따로 제 갈 길을 걷게 되면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살벌한 상호경쟁의 관계로 치닫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구지하철의 경산지역 연장에 미온적이었고 낙동강프로젝트를 경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경북은 대구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영남복합화물터미널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구가 ‘쉬메릭’을 홍보하면서 경북은 ‘실라리안’을 외쳤습니다. 대구가 달구벌축제를 벌이면 경북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열었습니다. 대구가 한방테크노파크를 구상하면 경북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추진했습니다.

이제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가 대구·경북 간 마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호 경쟁관계를 벗어나 상호보안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구·경북의 통합에 대해서는 학계, 경제계, 각종 시민단체의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대구·경북통합에는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찬성하신다면 향후 대구·경북 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천시 대덕, 봉산, 부항면 주민들은 무리한 임도 개설과 부실한 사후 관리를, 그리고 김천시가지 침수에 대해서 김천시민들은 감천과 직지천 합류지점에 뻥뻥히 들어선 50여개 교각을 수해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성주군 가천 수륜면 주민, 영양군 임암면과 석보면 주민, 상주시 모동면 주민, 영덕군 영해, 창수, 병곡면 주민 등은 각기 성주댐, 임하댐, 상판, 이동, 판곡저수지, 묘곡저수지의 관리잘못을 수해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도지사는 이와 같은 각 지역 피해주민들의 수해원인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및 보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해를 당한 피해주민들은 무성의한 수해조사와 비현실적인 수해보상규정에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수해조사와 수해보상규정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마침 특별재해지역을 폭넓게 지정하여 수해복구에 대폭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도내의 수해복구비는 줄잡아 1조5,00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가운데 70%정도를 국고지원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30%인 5,000억원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지사는 그 재원조달 대책을 밝혀주시고, 공공시설 복구공사에 우리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세의 1000분의 8에 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에 대비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도의 재해구호기금 적립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 및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다목적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계획중인 영남지역의 7개 다목적댐 중에 무려 6개의 다목적댐을 경북에 건설하려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댐 건설의 타당성에 관한 견해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김천의 감천댐과 영주의 송리원댐에 대하여 그 건설계획 및 필요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낙동강특별법이 제정·공포 시행되면서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더 이상 늦추어 질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대구시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하여 각 시·군별로 담당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조해녕 대구시장이 낙동강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대체로 남한강 물을 낙동강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이 프로젝트의 성격상 당연히 대구시가 경북도와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협의내용과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은 북부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북부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즉 북부지역 균형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북부지역 특화작물인 약초의 재배, 연구, 가공, 생산, 체험 관광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추진되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아주 좋은 사업계획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추진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와 부당성이 드러나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인사 및 조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경제통상실장, 과학기술 진흥과장, 기안자 3인이 모두 상주지역 출신인데 도지사는 이를 당초부터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3인이 최근 7월말 8월초 사이에 모두 타부서로 전환 배치된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 사업을 농수산국 유통특작과에서 다루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다음은 약초재배 여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북도의 행정통계자료 중 2001년도 도내 약용작물재배 및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도내에서 재배되는 42개 약용작물 중 영주 21, 봉화 19,

안동 18, 의성 17, 상주 6개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작목별 주산지 분포는 영주 9, 봉화 8, 안동 6, 의성 3, 상주 1개의 작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내 약용작물의 이러한 재배 및 생산 실태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한방자원 즉 약초의 재배여건이 기후, 토질, 식생 등에서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한방자원산업화단지의 예정지인 상주시 은척면 현지는 탄광지역의 중심에 있는데 도지사는 이 또한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후보지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2001년도12월28일 결재된 한방생명자원연구단지 조성계획 서류에 약용작물 집산지도 아니며 북부지역도 아닌 상주시가 후보대상시·군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선정 현장평가단 방문과 관련한 공문인 평가개요에 유치 신청한 4개 시·군의 국공유 부지 면적만을 적시한 것은 어떤 의도였습니까? 그리고 각 시·군별 현장실사 시에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은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평가단은 금년 1월12일에서 1월13일까지 이틀동안 유치 신청한 4개 시·군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단을 안내한 안내자 2명이 모두 상주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 1월11일 결정된 후보지 선정 평가표상의 평가항목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복합적 성격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단은 대체로 약초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평가자와 평가 대상간의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지 선정 평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후보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후보지를 평가하는 기준인 후보지 선정 평가표는 사전에 각 분야의 중립적 전문가들이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후보지 선정 평가표가 후보지 신청 마감직후인 금년 1월11일 담당과장 전결로 사후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지사는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표는 세부적인 평가항목별로 점수 가중치가 객관적으로 배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배점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컸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 사업은 약초재배 및 산업화에 중점이 있는 만큼 약초 생산실적과 약초재배 여건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점수가중치가 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가표가 부지 제공이나 예산확보 등 약초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추진에 치중한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15일 최종 결재된 경북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 기본계획서상의 후보지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상주를 고품질 약초재배의 최적지이며, 토질이 약초재배에 적합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이러한 선정 이유에 지금도 동의하십니까?

다음 후보지 선정 이후의 조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후보지는 금년 2월7일 상주시 은척면 일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12일, 13일 현장평가 후 2월7일 후보지 선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주시 은척면 일대로 후보지를 선정하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고 금년 8월까지 기밀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칭은 그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사업명칭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치신청을 한 각 시군도 사업명칭을 보고 후보지 유치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명칭을 당초 한방생명자원연구단지에서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한참 지난 5월 중순에 갑자기 한방자원산업화단지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과 관련한 기 확보예산은 모두 20억원인데 이를 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직전이자 당시 황성길 경제통상실장 전보 인사발령 직전인 7월25일 교부 결정하여 서둘러 사전 집행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향후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보지 선정절차 및 내용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필요한 지역마찰 및 반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 건을 전반적으로 재심사하고 당초 추진절차에 따라 심포지엄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선도로망 정비·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영주, 봉화, 울진 간의 물동량이 급증했는데도 국도5호선과 국도 36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미비되어서 중앙고속도로 풍기 IC에서 봉화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영주시가지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지 상습정체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바, 영주시내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대체우회도로인 가칭 “철탄산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긴급 추진할 용의 및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풍기 인삼시장, 순흥 소수서원 및 선비촌, 부석사 등지로의 외래 관광객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하였고, 경북, 충북, 강원 3도 연계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풍기~부석간 지방도 931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931호선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킬 용의 및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교육감께 묻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 정년단축과 선택형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라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 35명선 감축 방침에 따라 교원 수요가 급증하여 기간제 교사의 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결원 보충을 위해 채용되는 임시교원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불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무 추진에 책임감이 부족하고 업무담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정규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간제 교사는 지역특성상 읍면지역 이하의 근무를 회피하고 있어 도·농간 교사 수급에 편차가 심한 실정인데, 교대 졸업생의 경북지역 신규임용 유입책 등 교사수급의 애로를 타개할 방안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대구·경북간 교원 인사교류를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다음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 채용에 앞서 기간제 교사를 사실상 인턴과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교사들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강화 등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한방자원산업화단지와 관련한 답변은 내일 도지사 참석 하에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 대구·경북통합과 수재관련

행정부지사님의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에서처럼 대구·경북의 통합에는 양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입니다. 이 공감대 형성은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도 있을 수 있고, 그 공감대가 적극적으로 형성되도록 능동적으로 나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항상 공감대 형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집행부는 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해원인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임하댐 수량관리 잘못에 대해서...

임하댐 수량관리 잘못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운영기법으로 이 임하댐의 저수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태풍 때 임하댐 측이 하류지역 홍수피해만을 고려해서 방류를 늦추는 바람에 댐 상류지역 즉, 반변천 지역의 물이 역류되면서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댐 관리측이 인공위성으로부터 분석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도 인공위성을 빙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부에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김천 감천댐과 영주 송리원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집행부는 이런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늘상 해당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답변은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반드시 민주성으로만 됩니까? 이번 김천의 감천댐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댐 건설에 대해서 해당지역 수물대상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감천댐이 건설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감천댐이 기왕에 건설되었더라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되었더라면 지레면 일대의 5개면이 지금과 같은 참혹한 수해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민주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되고 주민의 반대가 다소 있더라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력히 설득해서라도 끌고나가야 될 그런 사안도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행정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이의근 도지사는 3선 도지사입니다.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뭔가 280만 도민의 앞날을 걱정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다수의 반대가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한방자원산업화단지

도지사님과 경제통상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그 답변에 수궁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님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영주시의회 의원들하고 영주시출신 도의원들하고 도지사님을 방문했을 때 도지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한방자원산업화단지는 애초에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북부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영주, 봉화지역이 약초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당초는 거기를 고려해 둔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지사님의 소상한 사업추진 배경에서부터 지금의 심정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으로서 특정지역만이 아니고 도 전체를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은 저도 평소부터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님을 평소부터 존경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수행하시면서 원칙과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는, 조금 전에 도지사님께서 본의원을 영주지역을 대표한다고 말씀하
셨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도의원으로서 영주지역
의 정서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도정을 골고루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있
다고 자부합니다. 영주지역만 대변한다고 보시면 섭섭한 말씀입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솔직하게 당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수궁
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도지사님께서 상식
적으로 영주, 봉화지역이 약초의 주산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전
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초주산지 아닌 데로 결정이 되었고 그
러면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수궁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것이, ...(서류를 살펴보이면서)... 이 서류가 당초 작
년 12월28일날 최초 기안된 결재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 시군
을 제1안, 제2안으로 나누어놓고 있습니다. 후보지 대상 시군에서 제1
안에는 개발촉진지구 11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2안으로는
북부지역 5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동, 영주, 상주, 봉
화, 영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러
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주를 여기 집어넣었습니까? 어제도 본의
원이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는 약초재배생산실적과 그 규
모가 큰 의미가 없는 통계숫자였습니다. 상주에는 텍사라는 종목 이
외에는 별로 약초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주가 북부
지역 5개 시군에, 주요 대상 시군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본의원으로
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작년 12월28일 최초 기안서에 후보지 대상 시·군이
제1안과 제2안이 있습니다. 제2안이 북부지역 5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상주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드
렸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약초재배주산지도 아니고 북부지역도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북부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장님은 작년도 7월에 우리가 작성해 놓은 제3차 경북종합개발계획을 아십니까? 2020년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는 그 계획을 아십니까? 거기 보면 북부지역은 7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상주는 죄송하지만 중·서부내륙권에 속해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아닙니다.

도가 자체 수립해 놓은 장기종합계획을 무시하고 다른 어떠 어떠한 서류를 근거를 대서 북부지역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건강부회가 아닙니까? 어쨌든 어떻게 상주가 귀신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당초 기안에 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게 경상북도 자체적인 행정통계자료고 작년도 약용작물실수확량이나 재배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놓은 통계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상주는 거의 무시할 정도의 실적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약초는...

제가 다시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영주, 봉화, 안동, 의성, 영양순으로 갑니다. 그런데 의성은 빠지고 어떻게 상주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상주가 들어가는지...

아까 생산실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상주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의 첫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한 걸로 인정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이 사항과 관련한 첫 질문이었습니다.

결재라인에 있던 세 분이 모두 특정지역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를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민

사소송법에도 특정사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든 특정사안하고 관련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제척·기피조항에 따라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정신들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지 선정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서 특정지역출신이 결재라인에 세 명이나 줄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부서에 이 업무를 맡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선정평가위원들에게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무관하다’ 하는 취지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법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위임만 하면 되는데 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습니까? 의당 이 사안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경제통상실에서 이 사업을 발의를 했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상 농수산국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일이고요, 약초라는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지역출신들이 줄줄이 있는 그 라인에 일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결과가 비록 타당하다고 손 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행정은 법치행정입니다.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재량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 무관한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역을 줄 때 후보지 결정에 관한 전권까지도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러면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있습니까? 도급을 주는 사람이 하도급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따른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본의원에게 이번 제7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이어 또다시 오늘 제2차 본회의 서두에 보충질문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번 도정질문의 마지막 시간에 본의원에게 또다시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지만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본의원의 수 차례에 걸친 질문과 보충질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전임 경제통상실장의 참석과 답변을 요구했으나 법규의 규정을 들어서 참석 답변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 전반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의혹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건을 종료한다면 도정질문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음을 본의원은 우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부득이 또 다른 도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즉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본의원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지정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의문을 풀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살려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도정질문 제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중 욱의원(교육환경위원회)

이제 광역의회가 4대째입니다. 5.16전에 지자체 법이 1949년도 제정되어서 그 동안에 16차례나 개정되고 1988년도 개정된 법으로 1991년도에 제4대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의회도 일곱차례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지만 광역의회 위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의 위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근간에 또 지난번 6대때 시절부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서 도 폐지론 내지 도무용론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위약 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이기주의요, 또한 배타주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법에 광역의회 위상이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가 3선으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남은 4년동안 지사가 중앙정부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업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예 앞장서는 지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때부터 연구해온 지방자치 조직개편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국민의 정부까지 연구과제로 되어 있고, 앞으로 도 틀림없이 이 문제가 거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행정학회나 행정연구소나 지방자치연구소 등에서 현재의 232개 시·군을 86개로 축소를 시켜서 도를 폐지하고 4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그런 작업도 구상하고 있고, 또한 시·도를 완벽하게 힘을 실어 가지고 시·군을 합쳐 가지고 예측을 시키는 그런 방향도 연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잘못된 것이 농어촌에 소위 도시와 농촌의 행정조직이 구별되지 않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선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자체 구조개선이 시급한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42명이 발의를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이다,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기초단체장이 공천제로 됨으로 해서 단체장은 정당의 시너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이 시·도, 시·군과 도의 인사교류가 봉쇄되었습니다.

또한 그 인사교류가 봉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의욕과 창의력이 상실되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기초단체장 얼굴만 쳐다보고 저 자리가 비면 내가 승진한다 하는 그런 사고로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상반된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항간에 도폐지론이 도출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기초단체장이 제왕적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또한 인사권을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 남발, 난개발 이 모든 것이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난 4년간 자치단체장들이 1/5이 법정구속 내지는 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만 의식하기 때문에 공천만 따면 된다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공천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관해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임명제가 아니면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연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 56.2%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당과 지역의 확실한 지배정당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 된다는 아주 선거만 의식하는 공천제 여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지역 정당에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광역의회는 선거일까지는 공천이 필요하고 정당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 4년동안 예산, 조례, 결의문, 건의문 모든 것이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말 순수한 도민을 위한 그런 의회로 돌아갑니다.

또한 위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운영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공천제가 되면 정당에 따라 다녀야 합니다. 또 시와 군민들이 바라는, 진정으로 바라는 일꾼의 역할이 부족하다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전에 시·도지사 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공천제 폐지론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시장·군수들 얼마전에 모임을 해서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수해나 재난이 왔을 때 만약에 임명제 군수나 정당소속이 없는 시장·군수가 되었을 때는 그래도 도에서 통제권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수재에 큰 영향이 왔다고 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림이나 육림사업에는 등한시하고 선심성 행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래서 표를 의식하고 과감하게 현장을 조치하는 것이 미비점이 많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사업을 중시합니다. 즉 말하자면 교각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장 처리문제가 뒤처리가 잘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해를 보면 산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간벌을 했습니다. 그 간벌한 나무가 전부 개울에 있었습니다. 이게 몽땅 다 떠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각을 전부 막았습니다. 또 하천 무단정작을 막 시킵니다. 또 하천부지 불하는 함부로 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하천이 좁아졌고, 소위 말하는 수재가 아니고 인재이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하천도 위임을 시장·군수가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절실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도 해야 됩니다. 또 기초단체에서 원하는 완전 지방자치제를 원한다 하면 운영도 자립이 되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자치단체면 최소한 독자의 세입으로 인건비는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10만 이던 군이 그 때 직원이 350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지금은 5만이 안 되는 데도 직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이래도 계속 경영이 가능한가?

또한 23개 시·군중에 상주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인건비를 못 주는 형편입니다. 나머지도 겨우 겨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는 유지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재정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로 말하면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면 조세법에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현재 상태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입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59 대 41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몇 가지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번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4시30분경에 충북 청주에서 오성바이오투촉제에 광역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사를 비롯해서 충남지사, 경남지사 세 분이 전국 광역시·도협의회 회장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행히 우리 도지사가 회장이 되어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런 광역의회나 광역자체단체의 모순점이나 고쳐야 될 점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 동안에 양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께서 전국에 로비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성과가 오늘 꼭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8월30일에 전국 16개 광역시·도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국정감사 폐지요구를 했습니다. 또 건의했습니다.

또 직장협의회에서 필요한 사항, 국정조사제도를 활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국정감사 강행 시에는 정문에서부터 봉쇄하겠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이 직장협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시·도의회는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게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국정감사자료 반대 작성거부까지 하고 전국 시·도지사에게도 국정감사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감사원과 소관부처, 그 다음에 광역의회 등 중복감사와 감사까지 준비하는 데까지 약 150일이 걸린답니다.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권은 발동하고 감사는 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회의원들이 27명이 자료를 380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에서는 도의원들에게 인사 청탁하지 말라는 성명도 냈습니다. 동료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는 직장협의회에서는 의회와 상호 언론을 통해서 협의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사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집행부에는 다음부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낙동강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 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거두는 게 연간 1,340억원입니다. 물이용 분담금을 지원대상 낙동강 주변 500m이내, 댐 상류 20km이내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안동, 임하 호수 내 수질개선 환경보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류 20km로 수변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영양의 경우는 영양읍 현리 세진주유소까지고 오·폐수가 1일 1만여톤 배출되는 상수원 오염원인

영양읍에는 수질 개선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청송군은 1일 1만여톤 배출되는 진보 청송교도소와 감호소만 수변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송군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지역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이 크게 난관에 봉착합니다.

또한 오염원 제거가 목적이고 수질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변지역이 꼭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되는데 도에서의 대책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경도대학 문제입니다.

이것은 6대에서도 몇 번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학의 입학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경도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원래 예천에 간 것이 잘못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대구인근, 적어도 칠곡이라든지 대구인근에 캠퍼스를 하나 증설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원을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지사께서도 공감을 했고 지금 경도대학 확장계획도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마는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갈 겁니다.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울릉도 풍력발전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12월3일 163차 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서 정상 가동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도는 '99년4월 울릉군 북면에 대체에너지 개발과 청정에너지 구축 사업비로 총27억5,000만원을 높이 62m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2기를 착공했습니다.

당시에 울릉군의 전력소모량이 1일 한 2,000~3,000kW입니다. 그 당시에. 화력이나 수력보유로도 전력공급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풍력발전의 전력이 바람의 강도의 변함이 심하고 사용이 곤란하고 한전은 공급중단과 주파수 변동 등으로 이에 도에서 6,000만원으로 한국전력 및 전문가에게 용역을 췄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이외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손발 묶인 채 단체장 견제” 하고 여기 나오는데 기가 찬 구절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에 대한 부담만 크고 내실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광역위원을 지낸 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광역의회의 기능은 예산심사와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 청원 및 민원처리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 기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거의 절반을 지역구로 하는 광역의원들은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각종 경·조사 일을 챙기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욕을 먹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도시보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또 한 구절이 이 뒤에 있는데 보면 “왜 내가 광역의원을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다”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제도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을 드리면서 이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 대의원(건설소방위원회)

성주 출신 김기대의원입니다.

경북을 웅도 경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작금에 와서는 농도 경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 이의근지사께서는 영남은, 경북은 문화의 고장이고 선비의 고을이고 영남 사림파의 본산이 경북이기 때문에 문화의 경북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 저는 오늘 이 문화, 관광, 예술 분야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국장에서 답변을 듣고 국장도 시원시원하게 자신 있게 답을 못하면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긴가민가한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답을 해 줘야만 되지, 30년 만에 부활된 광역의회가 이제 4대, 5대, 6대, 7대까지 접어들었는데 4대 때, 5대 때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은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퇴계 선생을 모시고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선조 때는 사림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기에 그렇게 도 어려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립명문대학 연·고대 정도는 안되겠나 하는 그런 명문대학이 도산서원입니다. 그 앞에 국학진흥원이라 하는 건물이 260억을 들여서 국비가 130억, 도비가 1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퇴계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큰 행사도 치렀습니다. 거기 원장은 경상북도지사를 역임하신 심우영씨라고 총무처장관도 하셨고 고향은 안동시 풍천면입니다. 이 분이 원장인데 한 달에 세 번 출근합니다. 세 번 출근하는데 가지고 가는 급료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부유한 자가 잘 되고 빈한 자는 팔시받고 그 장관까지 지낸 분이 국학진흥원 원장을 맡아 가지고 한 달에 세 번 출근하고 300만원을 가지고 가니 아주 고급 인력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학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학진흥원에는 내가 있어야만 그것이 운영된다 이런 사고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고서를 구입하라고 경상북도의회에서 2억을 책정해 줬습니다. 초선의원님 보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재선, 삼선, 사선의원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추경에 부결되고 당초에 의결돼 가지고 돈을 내려줬더니 이 원장이라 하는 사람이 한 달에 3번밖에 출근을 못하다 보니 업무과약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고서 사라고 하는 그 돈을 신간서적을 거의 다 사고 또 시설비, 용역비로 다 쥐 버리고 고서비는 3,000만원 어치만 샀습니다. 그래 경상북도지사가 결재 했는 것을 보니까 이분도 아마 연세가 60이 넘고 하니까 조금 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5억을 결재를 했는데 이 5억이 결재가 내려가면서 국학진흥원 운영비라고 해서 포괄비로 5억을 내려줬습니다. 지사가 그 당시에 이 2억은 경상북도가 생기고 고서 구입하라고 돈 준 예는 경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김기대의원하고 경상북도에 등록되고 있는 전문위원, 주로 교수입니다. 하고 잘 연구해서 고서를 잘 구입해서 퇴계선생이 세계적인 석학이요, 성리학의 거두요, 주자의 후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100여 국에서 지금 퇴계학, 성리학을 연구하는 마당이니 잘 구입하라 했는데 결재를 내릴 때는 운영비라고 떡 민간인 보조단체에다가 넘겨줘 버렸습니다. 거기에 사단법인 대표가 우리 이의근지사입니다. 여기 이사회를 보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안동시장도 계시고 사회 저명인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이 매이도록 문화의 경북, 선비의 경북, 또 우리가 5현이라 하면 퇴계선생이나 회재선생이나 여기 전부 경북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전부 한학을 공부하고 그 대학에서 사서삼경을 해서 급제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2억을 줬는데 현대문학과 학식이 풍부한 심우영 원장은 “신간서적 막 사봐라”, 3일밖에 근무 안하니까 올라오는 대로 결재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압니까? 왔다 가 버리면 100만원 받고 왔다 가버리면 100만원 받으니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오늘 자료를 내가 전부 입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지사는 도민이 내는 혈세, 국민이 내는 소중한 돈을 내 돈 아니라고 아무데나 쓴다고 해서 감시감독도 제대로 못하니 문화의 지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했는지는 몰라도 출타 중이라서 본인은 이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뼈아프게 들어야 될텐데 의회 안에서는 의원님을 존경한다 해 놓고는 그 시간만 비껴나면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사가 그러니 그 밑에 공무원들 이하동문이 될까 싶어서 저 혼자 걱정을 합니다. 제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줄 걸로 믿고, 우리 윤용섭국장께서는 2억 내려갔는 그 액수를 가지고 무슨 무슨 책을 구입했는지, 고서는 얼마나 구입했으면, 신간서적은 얼마나 했으며, 혹시 그 돈을 가지고 퇴계탄신500주년기념 행사하는데 쓴 것은 없는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관인 것은 거기에 중요서적을 납품한 사람은 주로 서울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광역시·도 건설국장이 중앙 회의에 갔을 때 태풍 15호 루사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니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또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수익계약을 해라, 그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라,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전부 서울로 다 가버리니 이름은 지역경제, 지역경제, 아름다운 수식어, 용어 쓰면서 실제로 행하는 걸 보면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런 점도 정말 지역업체는 그런 정도 납품하는 업자가 없는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도산서원 앞에 보면 국학진흥원이 있고 국학진흥원 앞에 보면 산림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23개 시·군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특히 북부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호감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삼선이라는 영광을 누렸습

니다. 이번에 추경예산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야생조수 사육장을 거기에다 만들어라 해 가지고 야생조수사육장을 도산서원 앞에다가 지정을 해서 작년부터 계속 돈이 내려와서 금년 추경에 15억하고 설 계도... 한 20억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도 안동 하면 도산서원, 도산 하면 퇴계선생입니다. 퇴계선생이, 사립대학을 그 후예들이 설립해 가지고는 그 도산에 입문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컸습니까? 우마차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하도, 상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도 사람들은 걸어가지도 못해 가지고는 거기에 입문을 못하고 부자집 후예 그런 분이나 도산 퇴계선생의 문인이 되고 지금 퇴계선생의 문인이 된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조상도 퇴계선생의 문인은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그 앞에다가 조수사육장을 지어라, 아무도 “거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양, 봉화, 청송 산짐승이 많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구 인근, 성주, 군위, 고령, 청도 이런 데 해도 될텐데 균형 개발하면서 왜 거기다가 또 사육장을 만들어야 했는지, 그 배설물은 안동댐으로 내려갑니다. 안동댐은 생활용수 겸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 균형개발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사육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겠는지, 이것도 보건환경산림국장, 박국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아마 여기에 대한 예비지식이 일천하지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행부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의근 지사께서는 전국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 상을 제일 많이 타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해만 떼다 하고 날짜만 변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국학진흥원은 투자하다가 투자하다가 이제 돈이 부족해 가지고는 중앙정부에 인수해 가거라, 이렇게 언론에 많이 비추어 집니다.

그 귀중한 도비 130억원을 투자해 놓고는 이제 더 투자를 못하겠으

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이율배반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적에는 그렇게 자랑하고는 더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못 하겠다.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낸 분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였고 싶고 조 수사육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의근 지사님 손 딱 잡고 이제 4선은 안 된답니다. 3선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 벌이지 말고 있는 사업을 차근차근 마무리짓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또 대학교수한테 용역 주고 또 주위에 어떤 좋은 아이템 없나 연구해 보라 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기상천외한 것을 발굴해 가지고는 “이것 한번 해봐!”, “예, 지사님 정말 그것 좋습니다. 생각 잘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습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 있는 것만 해도 마무리시키려 하면 복잡하니 더 이상 새로운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자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 정말로 충정 어린 부탁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 우리 교육감께서도 오전에 근무하고 또 어디에 출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내가 이런 것을 봤으면 서운하지만 내가 몇 번 의원을 하면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능수능대한 사람이 못됐지만 처음 나오신 7대 조선의원님은 상당히 서운하실 겁니다.

단, 말을 안 하실 따름이지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가슴을 치고 서운해한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야 되지, 내가 그래 하고 나가도 뭐 뒷말 없더라 그래 넘어가더라 1만 분의 일이라도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잔재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 15호 루사에 의해서 경상북도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어느 공무원 하나 인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재의 “인”자 하나 내는 사람 없고 주민이나 의원님이 인재에 가까운 것도 군데 군데 우리

가 발견을 했다 이러면 처음에는 공무원도 그래 맞습니다. 저기는 인재가 10% 내지 20%는 되지 싶습니다. 이래야만 옳은 공무원일건데 천재 아닙니까? 이것 뭐 우주섭리는 거짓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만만한 게 하늘이고 만만한 게 자연이고 만만한 게 우주이거든요.

그러니 말 없는 우주섭리는 참을 따름이지 공무원에게 따끈한 이번 에 벌을 주었습니다. 내가 비를 내려 가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해 주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엄한 벌을 내렸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경상북도 교육감은 재해가 일어났다는가 천재지변 이 났다는가 전쟁시에 비상시에는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값은 고하 간에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 하는 법령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행자부 장관도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 시켜라 하도급을 꼭 주어야 할 데가 있더라도 그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라!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 가지고 항상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늦게서야 이제 철이 들었는지, 그런 걸 신문을 봤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은 지금까지 그 많은 공사발주를 “전국입찰”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시·도에 많이도 가지고 갔는데 이번 태풍 15호 루사의 선물을 이지역 경북도 업체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법령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제2차 본회의

양 재 경의원(농수산위원회)

최원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청도 출신 양재경에게 도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옵니다.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과 실·원·국장님, 도승회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소임과 공복에 수고가 많습니다. 태풍 루사로 위로 방문 등으로 더욱 수고가 많습니다. 때로는 바야흐로 과일과 오곡이 하루가 다르게 알알이 영그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번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300만이 함께 뛰는 도정, 열린의정, 밀착의정,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민주의정, 그리고 의회와 도정이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견과 질문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첫째, 버스업계의 재정지원 71억원에 대하여 별의 역사는 일한 만큼 풀이 쌓입니다. 농부가 삼질을 한만큼 웅덩이가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버스운행 횟수에 비례하여 적자가 누적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말은 승객이 1명 내지 4~5명 때로는 승객이 없는 버스를 운행하여 국가에너지 정책, 소음 및 대기 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사운데 지금까지 재정적 지원한 연도별 액수와 총액은 얼마이며, 회사는 몇 개회사이며, 버스대수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국이 이라크 침공시 유가가 50불, 70불까지 내다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재정지원을 줄여서 버스회사 운행횟수의 제한과 같은 경영합리화와 재정의 절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번째, 2002년도 경북세계농업한마당 국제 NGO대회 일본과 같이 잘 사는 나라도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제 NGO행사를 최초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씨는 총리 재직시에 관변단체 정부지원금 중단을 제창하였습니다.

이의근지사님께서서는 6.13지방선거 전국광역단체장 중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하셨고, 이제 3선 마지막인데 국가가 주최할 행사를 본도가 2002경북세계농업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해 법인체 설립 즉 사단법인 경북세계농업포럼이사장 최양부를 통하여 행사를 앞으로 문화엑스포와 같이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 국제 NGO대회를 계기로 관변단체 및 농어민 단체도 예산을 대폭 삭감 혹은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번째, 휴경보상금 제도 국제식량농업기구 FAO는 대한민국의 1년치 양곡비축량이 680만석인데 현재 1,380만석이 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량의 비축은 농정의 맹점에서 기인된다고 느끼고 농정의 틀을 바로 세워 국가적으로 현재 실시 중인 직불제 ha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을 지불하면서 양특적자와 북한의 차관형식의 400만석 사료 운운 등 실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직불제에서 휴경보상금 제도로 바뀌면 매입비 한 가마 40Kg 1등급 5만4,000원에 매입하여 2년 내지 4년간 보관하고 있음으로서 보관량과 매입량이 감소되어 매입자금과 이자를 대폭 줄인다, 두번째, 창고보관료와 보험료

그리고 검사인원의 감소, 보관창고 감각상각비 지출 비용을 대폭 줄인다, 세번째, 휴경면적만큼 땅심을 북돋우고 연작의 피해를 줄이고 휴경답에는 참깨, 콩, 옥수수, 조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수입하는 일정량의 외화를 줄이고 부족분의 잡곡을 충당한다, 네번째, 국가 양특적자에 건전재정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한다. 위의 말씀과 같이 직불제보다는 휴경보상금 제도가 일본에서도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서 실시하고 있기에 본의원은 도정질문을 하면서 최원병의장님에게는 대정부 휴경보상금제도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정부에 촉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번째, 농촌 제방 기초 붕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막대한 재원의 소요, 하상의 중심이 손바닥처럼 물의 중심부로 흘러야 될텐데 손등처럼 양방천 밑자리를 흐름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데 유비무환으로서 농한기에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도일원에 하상 높은 곳을 정

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섯 번째, 농어촌 보증제도 개선방안, 농협과 축협 그리고 시중은행의 보증제도의 잘못으로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 진출하여 자체 신용조사로서 연대보증없이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농·축·협은 농업에 사용되는 소수의 보증보험 즉 농사용 자금에 한하여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물고 물리고 얼키고 설키고 하여 선량한 농민이 보증으로 고통과 파산, 이농과 이혼, 금융불량자 양산으로 고요한 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량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계 한국진출 은행처럼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로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친목보다 이런 제반문제를 청취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한전, 농협도본부와 같이 농정의 밀접한 기관에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300만이 함께 뛰는 열린 성숙한 도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도내 기관장을 도의회 도민의 궁금증 알려는 사항을 질의 응답할 시간을 가짐으로서 도민의 단합과 제도개선 그리고 일부 도민의 의회무용론에 이제 의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인식전환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기여하리라 사료되기에 위에 말씀드린 기관의 도의회 출석방법은 도집행부와 의회 의장단에게 결의를 촉구합니다.

여섯 번째, 경상북도 자매결연에 관한 건 이 관계에 대해서는 4대 때는 도의회에서 질의가 없었습니다만 5대, 6대때 질의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상북도 일본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한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으로 세제, 경영, 환경, 조례 등 경상북도의 크나큰 도정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의회차원의 교류를 중지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승회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승회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병들고 시들어 가는 폐교를 생산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첫째, 우리 도내 폐교는 몇 개교이며, 지금까지 매각처분을 한 학교, 그리고 미처분한 학교는 지금 현재 몇 개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폐교된 학교를 임대했을 경우 임대의 효과와 임대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미관상 관리상태가 보기에도 흉하고 미활용 폐교의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떠하신지요.

네번째, 처분한 폐교와 임대된 폐교의 수입금 현황과 활용 내역은 어떤지.

다섯 번째, 우리 도내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와 건물 3만2,513제곱미터 부지는 49만6,249제곱미터로 집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세 교육의 신성한 교정이 날이 갈수록 잡초, 곰팡이, 쓰레기 등 유령의 전당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교육감께서는 가칭 학교부지 및 건물매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단에게 축구를 말씀드립니다.

제60조 경상북도의회규칙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발언 혹은 청취를 하기 위해서 일자와 시차를 두어 의회운영시 의원들의 중지를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고 더 활성화가 되게끔 의장단에 운영의 방법에 신중한 묘안을 촉구합니다. 왜 하필이면 도정질문시에 시간을 활용하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의원간담회 혹은 의원들의 의

회활동 조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본회의가 아닌 일체 모임이 없었기에 오늘 정례회에 본의원이 경상북도의회가 한층 더 성숙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단의 수고에 더욱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문과 의견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경 찬의원(산업관광위원회)

영덕군 출신 손경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3백만 전체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91년 부활된 지방의정 11년을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의정 4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불황이었던 얼었던 지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다소 힘을 입어 활기를 찾아가 싶었더니 이달 초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경상북도도 예외 없이 역사상 초유의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처한 사회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역경제의 회생이 유일한 대안책이라고 확신하면서 태풍과 수해로 인해 실의와 좌절을 겪고 계신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도정 전반에 관해 갖고 있었던 관심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 및 사후대책 수립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본의원의 질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경상북도지사의 공약 및 이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민선 1·2기에 이어 3기에도 도지사로 선출되신 이의근지사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기 동안 우리 도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신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는 민선자치 3기를 여는 시점에 있으므로 지난 임기 동안 지사의 공과를 정리하고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3기 공약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지사의 공약은 도정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3백만 도민이 함께 염원하는 사항들을 임기 중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은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약으로 선정하신 10대 실천과제, 51개 시책사업,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시적이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거나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관한 공약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3월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도청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경북·대구의 통합이 맞물려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므로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청이전에 관한 견해를 공약사업 차원에서 대구·경북을 통합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사랑과 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공약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노인이 살기 좋은 우리 경북을 건설하겠다는 시책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작년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4%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의 진입을 예고하면서 노인복지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장으로 이동·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금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설은 단 2개로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은 약속한 공약에 비해 이행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관련 시설들을 조기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기건립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선 2기 중 공약사항 실천에 대하여 도지사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자평을 해 주시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민생안정 5대 첨단사업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개편 등 8대 실천과제, 57개 시책사업의 상기 공약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해 중부선 및 국도 7호선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걸맞는 무한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적과 함께 보경사, 고래불, 백암, 성류굴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해안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동해안은 국도 7호선 1개 노선이 유일한 연안교통기구로써 대구~영덕~울진 간을 경유하면 4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지역의 산업, 관광, 모든 경제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동해 중부선 철도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볼 때 서해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안을 국제관광벨트를 조성 중에 있는 마당에 우리의 동해안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는 동해 중부선 철도의 조기 부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사업계획과 그동안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의 계획과 전망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앙고속도로와 동해안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이에 관련한 도의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덕군에서는 국도 7호선 4차선 조기완공과 34호선 조기착공을 위하여 관내에 102개 기관단체장 등 범군민국도확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10월경에는 중앙부서 및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대책과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주민정서와 낙후실태를 감안한 도지사의 동해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과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인재를 적재적소의 배치야말로 개인의 창의력 개발은 물론 조직체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인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인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인사제도에 있어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직위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발굴 임용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추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방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의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6월30일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음에도 우리 도는 아직 시행에 있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개방형 직위의 선정은 공보관, 법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관련 사업소장, 국제통상과

장, 정보통신담당관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의 조직에 대해 치밀한 경영분석을 시도한다면 선정대상은 폭이 예상외로 넓어지리라고 보는데 답변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의회사무처 조직에 개방형임용제의 도입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그 선정대상은 어느 직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기강 쇄신 및 부정공무원 비리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올바른 공직기강의 확립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대다수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배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금품수수 및 금품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 그 내용도 날로 다양해져 가면서 치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공직비리의 원인은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담당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 그리고 민원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사, 감찰활동과 함께 비리발생의 원인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이 해결대안이라고 보는데 답변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제도개선의 구체적 실천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도 소속 부정 및 비리공무원의 발생현황과 징계내용도 함께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7일자 단행된 경상북도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공정한 인사야말로 조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실인사 로비인사 불공정인사로 동료간의 위화감을 극대화시켜 최악의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이번 인사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단행되었는지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과 사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결성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현 공직사회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기본권보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공무원노조 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6일 작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년이 넘게 논의해 오던 공무원노조 관련법이 12개 쟁점사항 중 단체의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조합 전임자 여부, 분쟁조정기구 등 5개 사항이 미합의된 상태로 정관을 그대로 수용 입법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노동계의 대상공무원들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으로써 국민여론과 함께 연말 대선 정국과 변수에 맞물려 새로운 사회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노조 결성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식이든지 접근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식이나 계획이 검토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제도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면서 그 근무에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 당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 자료에 보면 복지전담 공무원은 정원이 664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7가구 당 한 명으로 표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원은 529명으로 본위원의 자료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79.7%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배치가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위원은 사회복지사의 수급 및 배치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도립경도대학에 사회복지과를 개설하여 도내 지역별로 인재를 추천 입학시켜 양성된 인재를 연고지에 발령하여 근무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교육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현실을 살펴보면 정책 당국은 제7차 교육과정계획이라는 교육의 다양화와 수준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더 이상 자기 개발과 진로선택, 입시 등에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공교육의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는 수많은 모순과 현상들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교육계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각 교육주체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재단과 교사의 대립과 갈등, 교직원의 부정과 비리, 일부 몰지각한 교사의 다단계판매 종사 등 비교육적 현실들이 오늘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경북교육계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교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해 자기극복을 할 수 있는 사명감과 성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의 교직에 종사하면서 각종 비리나 부정에 연루된 교직원의 유형별 명단을 밝혀주시고 조치사항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금년도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1년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북도내 54개 대상기관의 감사조치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전체의 0.4%인 6명이 훈계조치 93%인 467명이 주의, 6.6%인 33명이 경고로 그치고 있어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에 따르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더구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자가 퇴직을 한다는 이유로 불문에 붙인 경우도 6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감사조치는 끼리끼리 봐 주시기식 조치라고 보는데 답변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교육대계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공급자인 학교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연간 사교육비가 추정치로써 약 6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등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비대해진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일정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허물어져 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초선의원으로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몇 가지는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듣고 또 차후 오늘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회의가 있고 거기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의 이의근 지사님에게는 꼭 몇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질문할 것도 있어서 제가 일문일답을 요청했습니다. 이의근 지사님, 일문일답하려면 나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지사님과 꼭 한번 직접 일문일답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사실 아까 정책사업 등은 여기서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초선으로서 어제, 오늘 이틀간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사실 질문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기 위한, 흔히 말하는 작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확한 답변요지의 답변을 하지 않고 실지 엉뚱한 이야기를 더 많이 오래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끕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들도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질문자 역시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춘각을 곤두세우는데 솔직한 말로 진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서두에 한 3, 40분 다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 답변하시는 분들은 근 5, 6년 이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제쯤은 질문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뉘우칠 줄도 알고 개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에게 몇 가지를, 답변을 꼭 듣자하기 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11년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착공해서 11년만에 완공이 되었는데 총사업비는 4조7,000억이 들었습니다. 동해안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시작해서 예산이 전부 1조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된 것은 4,800억밖에 안 됩니다.

13년 동안에 영덕군에서, 7번국도상에서 한 해에 38명이란 생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480명이란 사람이 중경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13년 동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80명이란 사람이, 영덕의 군민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갔습니다. 7번국도 영덕에 한 것인데 그것을 포항에서 울진까지 계산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영덕군민들이 범군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군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소신이 있다면 신념이 있다면 이 도로는 분명히 지금쯤은 완공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장미빛을 내 놓습니다. 철도, 철도. 정말 철도를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올해 40억 예산 들여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역의 군 단위는 벌써 철도역을 우리가 세우느니 너희가 세우느니 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을 강구에 세우느니 후포에 세우느니 하면서, 현실성 없는 일을 주장만 하다가 보니까 지역은 자꾸 이질감만 생깁니다.

도지사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된 경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된 경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상북도에 이의근 지사를 위시해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어저께 이 자리에서 우성호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한방단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 때부터 시류에 따라서 요동하다가 보니 지역은 지역대로 갈등이 생기고, 바로 이 의회 안에서 각 지역의 도의원들끼리 언성이 오가는 일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긴 백사장입니다. 명사20리라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긴 백사장입니다. 8km의 백사장이 폭은 500m예요. 규사라는 가장 깨끗한 모래가 있고 그 8km뒤에는 해

풍을 막아주는 송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천혜의 자원지에 또 어느날 갑자기 선거 때가 되면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이란 것을 한 중간에 슬쩍 해 났습니다. 지사님이 아까 동해안에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또 뜯어서 어디로 옮깁니까?

경상북도가 하나된 경북이 되려면 입지선정부터 좀 더 심도있게 관여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지역에는 유치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유치를 한다면 훗날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사님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도민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의근 지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께서서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전국에서 최고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도정에 들어오니 손경찬 도의원 자신도 만약에 경상북도지사의 자리를 준다면 이의근 지사님같이 훌륭한 소리를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의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정확하지 않은 데, 저는 예결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제 3선의 마지막 임기로서 정말 역사에 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사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어려운, 우리 주위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제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가령 영해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해면 출신입니다. 사회복지 수용자는 500명인데 현재 사회복지사는 2명입니다. 과연 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다

가 보니 면장의 잔심부름부터 계장의 잔심부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의 다른 공무원들과는 관심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상북도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기획을 해서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의 업무는 창의력보다는 사명감과 소신입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위의 어려운 노인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경상북도 각 지역마다 고등학생들을 추천해서 바로 경상북도가 투자한 경도대학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각 지역에 가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 우리 소년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진정으로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의근 지사님께서서는 훗날에 훌륭한 지사로 남기를 거듭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나머지 집행부의 답변은 차후 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할 때가 있고 답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 회 영의원(건설소방위)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와 도승희 교육감, 배석한 관계관 여러분, 문경시 출신 채회영의원입니다.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와 결함이 잇따라 행정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에 도입한 캔두형 중수로에서는 중수가 누출되고 근무자들이 피폭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사용하는 울진 4호기에서 지난 4월5일 전기발생기 세관파탄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을 포함한 물 45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만약 이 물이 대량으로 흘러나온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더라면 원자로를 식혀줄 1차 냉각제가 부족해서 폭발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세계적으로 11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국표준형 원자로가 채택하고 있는 ‘인코넬 600’이라는 세관재질은 ‘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균열에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세관재질을 사용하는 한국형표준경수로, 즉 가압경수로는 울진 3·4호기와 영광 5호기에 가동중이며 건설 중인 울진 5·6호기와 영광 6호기가 있고 건설예정인 원전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7일 월성 2호기에 냉각수 정화계통에서 미량의 중수가 누출되어 10여명의 직원이 삼중수소에 파폭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산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7기가 가동중이며 2015년까지 26기의 원전을 추가보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성 지표인 평균원전가동율은 93%의 가동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계 평균치의 10%를 상회하는 원자력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자체기술로 원전을 건설할 만큼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이를 KEDO 북한경수로 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등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9월4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가 1978년5월15일 첫 조사를 한 후 지금까지 11.17mm 내려앉은 데 비해 바다로 향한 동쪽은 3.63mm 내려앉아 7.54mm 만큼 서쪽으로 더 기울어 내려앉았다고 국정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성주민들은 단층지대에 자리한 월성원전이 지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는 기계결함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원자력발전소 민간감시·환경감시기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단위의 감시기구는 물론 해당지역인 울진이나 월성에서도 필요한 조례마저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인근지역에 둔 부산의 기장군과 전남 영광군이 이미 기구를 만들어 활발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도단위 감시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해당 시·군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라는 권고는 할 수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백혈병 환자의 생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천부인권의 막다른 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지금 백혈병 환자들은特效약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백혈병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신약 글리백의 원

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글리백 독점 생산사인 노바티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치료제도 아닌 유지약제인 글리백 약가를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결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를 감싸주는 처사라는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글리백 독점 공급사인 다국적 기업인 노바티스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글리백협상소위원회에서 글리백 한 캡슐당 2만 3,045원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고시가 1만7,862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매월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부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노바티스사는 국제재단이나 비상업적인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일각의 주장은 일방적인 지적재산권침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바티스사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2만원대인 글리백 약가를 한국만 예외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바티스사의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글리백 시판 8개월만에 투자비는 이미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당국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고시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노바티스사는 오히려 생산철회를 앞세우며 흥정의 우위를 점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글리백 생산원가는 845원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노바티스사의 횡포때문에 불쌍한 백혈병 환자들만 글리백을 부르짖으며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 이윤을 올리고 있는 노바티스사가 지난해 11월 약가협상이 결렬되자 글리백 협상을 중단하고 있는 약마저 회수한 사실에서 보듯이 글리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인 노바티스사의 이윤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수천만

배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항상 소유자 위주로 인식되어 왔지만 국제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제한강제실시는 태국과 브라질 등과 같은 제3세계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특허의 공공적 기능이 국내법 조문에서 분명히 명기된 이상 글리벡 강제실시권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께서 글리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국과 케나다는 9·11 테러 이후 탄저병 치료약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였으며, 노바티스사의 지적재산권 운운함은 국제자본의 횡포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강제실시권 발동의 국제적 근거로 지난 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중 체결된 공공의 건강과 약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목적의 강제실시권 집행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리우는 글리벡은 만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에 눈이 먼 제약회사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약을 먹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정부가 글리벡을 백혈병 환자들에게 가속기와 급성기 때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치료와 완치가 아니라 죽기 전에 글리벡이라는 약이나 한번 먹어보고 죽어라는 한뼉한 오만과 무책임의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리벡을 가속기와 급성기 때만이 아닌 백혈병 발견 당시부터 투약할 수 있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정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하며 우리 도의 백혈병 환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늘농사의 파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 한·중마늘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2003년 이후 긴급수입제한, 즉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포기하는 내용의 부속서에 합의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약이나 국내산업피해구제법상의 우리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연장포기합의 자체를 2년간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긴급수입제한이라는 대외조치와 관련품목 경쟁력 강화라는 국내적 조치가 맞물리는 관계로 조치내용과 기간이 핵심인데 협상에서 연장포기에 합의해 주고 그 내용마저 쉬쉬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치 권리포기가 최선의 협상카드인 양 구고삼배하는 구걸협상이라는 말씀을 본의원은 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7월 1차협상에서 외교통상부는 연기포기, 연장포기 합의내용만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기간을 5개월이나 단축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00년6월1일부터 2003년5월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고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기간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5개월이나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단축사실을 2000년8월2일자 관보에만 게재한 채 협상성과설명보도자료 2000년7월31일자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WTO 규정과 국내법상의 특정물품의 긴급수입제한조치신청은 피해주체의 권리이고, 이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무역위원회의 준수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기간을 임의대로 단축하고 연장포기에 합의한 것은 이들의 권리를 통상당국이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번 한·중마늘협상 파문은 통상당국의 대외협상 결과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뉴라운드, 즉 도하에서 열리는 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 즉 FAO 협상 결과에 대해 농업인이나 국민들이 이면합의 의혹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치명적 신뢰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상에 관해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농업인이 없습니다.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정부 스스로가 강구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저항에 부딪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경상북도 또한 피해지구의 하나입니다. 그러한데도 무역위원회가 마늘 긴급 수입 제한조치 연장을 위한 농협의 피해조사 신청에 대해서 7월29일 조사불개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불개식 결정제도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것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피해조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이미 피해가 없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등 피해조사를 시작할 이익이나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사자체를 아예 개시하지 않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역위원회 마늘 피해액 조사불개식 결정은 우리 농업인을 우롱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봅니다.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현 사태는 마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자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통상법상 허용된 긴급제한 조치제도를 이용하려는 마늘 농업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문전에서 차단하는 것은 결코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근지사님, 경상북도 의성에서 농업인들의 분노에 찬 절규로 인해서 정창화 국회의원께서 13바늘이나 두부를 꿰매는 현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늘농사로 하는 농업인의 강력한 저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경상북도 마늘농가에 대한 보호대책과 그들의 생존권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과 교류를 위하여 교류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보나파르 나폴레옹은 ‘중국은 잠자는 거인이다 그를 잠자게 버려두어라, 그가 깨어나면 세계가 벌벌 떨것이다’라고 1세기 훨씬 전에 포효한 말인데 이 말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0년전 조선의 지식인들도 짝을 지어 개화된 일본의 제도와 산업 및 교육제도를 배우려고 4개월동안 시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는 중국을 알리고 중국의 열기로 후끈 달아 있고 때를 맞추어 남북화해 분위기와 교류협력의 틀이 시작됨에 따라 신의주 경제특구 발표와 계획이 흥미를 돋우고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가 가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원으로서 세계 경제의 축이 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우문원 교수는 자신이 주도하여 100여명의 교수진과 2001년 2월 완성한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프랑스 수준인 2만5,000불에 달하는 시점을 현대화의 목표로 설정할 때, 상하이는 2015년에, 베이징은 2018년에 도달한다고 의욕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수출 지향적인 우리 경제의 필수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근지사님, 경상북도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입각하여 파견된 경상북도 해외파견 공무원 현황을 보면 뉴욕과 오사카에 통상주재관 각 1명, 시마네현과 하남성에는 국제교류원 자격으로 각 1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통상주재관이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인 동질성으로 인한 중국의 개방정책이 앞으로 우리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교류와 협력이 무척 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대한 공룡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본도의 정책지역으로 중국은 적격의 국가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수출비중도 2001년 통계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국 파견은 통상주재관 직위를 격상하여 파견함으로써 해외통상 시책 추진 및 우리도 중소기업의 진출과 수출활동을 강력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지사님,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로는 미국과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통상주재관의 활동은 민간부분의 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역할이 미미하여 차제에 철수하는 것도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전투의 원리 또한 정확한 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개도 산짐승의 산맥을 물고 늘어지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대중국 수출 전략을 앞장서서 주도할 수 있도록 직위를 격상시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을 요구하면서 현명하신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국회에서 폐기된 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교육위원회가 잇달아 폐기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11월5일 모의원의외 여야의원 34인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농민단체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폐기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와 법안심사소위는 각각 심사보고서에서 ‘국내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법으로 규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즉 WTO 협정 위반으로 인한 통상마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농어민 단체는 물론이고 소비자 단체, 학부모단체, 통상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등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국회교육위원들의 참나무 전대구멍 같은 물건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자국 농산물에 의한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자국의 농업인과 농산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자국의 먹거리에 대한 자신감과 의무감을 길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대한민국 국

회의원들이 통상마찰을 우려해서 농어민단체들의 간곡한 절규를 외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의 먹거리에 익숙하게 하여 토종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가지 수입농산물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 우리 농산물을 뇌리에 깊이 간직하게 하려는 농업인단체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금의 한국의 농업의 현실은 사면초가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려는 농어민들의 절규는 마치 일제 하에서 국어를 말살하려는 일본의 정책에 맞서 국어를 지키려는 한글학회 사건이나 태극기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그때의 국민정신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신토불이라는 대중가요까지 만들어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지키려는 국민적인 요구를 국회만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WTO의 눈치나 보는 국회의 처사를 본의원은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고양이에게 아무리 수입농산물과 또 수입육류를 먹인다고 해도 호랑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개꼬리를 아무리 묵혀 두어도 황모가 되지 않는다는 옛 조상들의 말은 제주도의 굴나무를 육지에 심으면 탕자가 달린다는 진리와 통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께서 심사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도 서울이 멀다하여 과천에서부터 기어간다는 식으로 폐기했다는 것은 그들의 국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농어민단체들의 학교급식법 제정 청원은 쉽게 생각하면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때 우리 속담의 ‘세 살 버릇이 여든살까지 간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본의원은 한국 농업인과 농산물을 위해서라기 보다 진정한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학교급식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회에 직접 건의안이나 청원을 낼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조금전 우리 손경찬의원께서 집행부의 답변이 지극히 서술적이고 시간을 때우려는 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동감을 느끼면서 백혈병 환자의 가속기나 만성기에 투약하는 것보다도 값비싼 이 약 글리벡을 백혈병이 나타났을 당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판정이 났을 때부터 이 약을 공급할 수 있는... 노바티스사가 너무 비싸게 공급하고 있으니 생산원가가 850원 정도되는 것을 2만몇천원씩하는 이 문제를... 돈 없는 서러운 환자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책적인 입안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극히 그 대답이 서술적이고 답변을 늘어놓는 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본의원의 주된 질문이 강제실시권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깊이 개입해서 우리 환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도 완치케 하자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님, 그 답변서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0년도 후반기에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학교급식법을 제정해서 자국의 농산물을 전적으로 활용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국농산물 애호정신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농산물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의 답변이 분명히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이 우리쌀을 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먹거리에 대해서 납품업자들에게 우리농산물을 전적으로 납품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2000년도 후반기에 답변한 그 내용이 지금 또 다시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상명하복의... 정말로 복지부동하는 지극히 모호한 공무원상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2년동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정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또 때를 같이 해서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하도록 학교급식법의 제정을 요청한 때를 맞추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 하반기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함께 이 법을 제정하는 데에 협력을 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질의하는 의원들의 말이 산 너머 메아리처럼 구름이 산을 지나가듯이 하는 그런 아주 “一片白雲이 橫谷口”같이 지나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 본의원은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집행부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말로 이것이 ‘樹欲靜而風不止 이구나!’하는... 큰나무가 조용히 있으려 해도 도의원들이 자꾸 흔들어서 조용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용기를 가지고, 또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수없이 오고 또 수없이 개방되는 상황이고 별의별 농산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익숙한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후일 버터 한 쪽만 먹어도 영어를 브로큰 잉글리쉬(broken English)를 할 정도로 화해 간다는 이 심각한 문제를 교육청 당국에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성 하의원(교육환경위원회)

경산출신 김성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나라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드리는 내용 역시 바로 도민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시적인 문제에 제 질문의 요지가 있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도정의 방향에 대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도민에게 밝히는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6일 제1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과다 배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지적에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다이옥신 절감 대책을 일선 시·군에 지시해 주신 도지사님, 박승호 보건환경산림국장님의 조치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이옥신 절감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절감 대책 내용 중에 현행 폐기물 법상 시간당 0.2톤 이하에 소형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기준 및 측정 의무가 없어 규제가 불가능함으로 2005년까지 1개 시·군에 1~2개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일선 시·군에 추가로 설치하는 소각장의 규모를 다이옥신 배출 기준과 측정의무가 있는 0.2톤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 일선 시·군에 현재 추진중인 소각장은 물론 향후에 계획 중인 모든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 기준도 있고, 측정의무도 있는 법적 규제장치 마련되어 있는 시간당 0.2톤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이옥신 절감대책 내용 중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 시·군이 소각시설 운영관리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다이옥신 절

감 시설의 설치는 물론 이들 시설의 고장시 장기 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태풍의 피해로 우리 경상북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고 경제 기반마저 무너져버린 수재민들에게 피해복구만이라도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용자 특별자금이나 공공관리 자금 등 중장기 용자는 물론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가뜰이나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복구비 마련이 늦어질 경우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행 재해구호법 상 재해구호의 1차적 책임은 각 시·도에 있으며, 재해에 대비해 매년 일정액의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홍신 국회의원의 국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은 56%이고, 전남 139%, 서울 100%, 경기, 강원은 75%, 울산, 제주는 73%, 부산은 71%인 반면 경상북도는 최저 적립 의무액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재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왔는지 자못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재해에 대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재해 예방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재해에 대비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경상북도는 평소 도내 89개소에 재해 위험지구를 정하고 그 등급을 매겨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시·군별로 재정 현황과 피해 복구비 규모, 그리고 복구비의 조달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적립 의무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마저 적립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해구호기금의 재원과 연도별 적립 현황, 그리고 이번 재해에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그리고 향후 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적립하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해 온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기존 재해위험지구 중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이번 재해로 인해서 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은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지방 분권화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일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경제의 과포화 상태는 물론 교통 환경에다 정보까지 독점하는 수도권 일급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함성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 바 있고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또다시 대구에 경북에 있어 대구 집중으로 인한 경북의 피해를 염려한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은 대구 중심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에 집중을 억제하고 주변 경상북도에 속한 중소도시의 개발을 통해

상호간 발전을 위한 협력에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지하철의 경산 연장의 필요성은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에서 경산으로 출퇴근하는 대구시민들과 경산에 소재한 많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을 보다 편리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쇼핑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등 대구생활권에 속한 많은 부분들의 편리성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대구시민들을 수용할 직장이 경산에 없거나 대학이 전혀 없다면 대구시민들은 지하철의 경산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민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대구 주변 경상북도의 중소도시에서 존재할 때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은 대구와 그 주변도시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에 수정의견으로 제출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경쟁력 있는 편익시설들을 광역권에 속하는 경상북도의 지역으로 설치하자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 계획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몇 가지 수정의견을 붙여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구체적인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수도권 개발계획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물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은 본의원이 보기에 기본 골격만 짜여져 있을 뿐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대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구시 편입 10년동안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구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만 달성군에 몰려있다고 대구에서 서자취급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경상북도로 돌아갈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표현대로 해프닝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심정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서는 민선 1, 2기 도지사 선거를 통해 도청 이전을 약속했지만 금번 3기 선거를 통해서는 대구·경북통합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염원해온 도민의 의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분리이후 도청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논리에 밀려 언급하는 자체가 의미마저 없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대구·경북의 통합이 실제 가능한가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북은 도청 이전을 통한 자치경북의 새로운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도지사님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구·경북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약실천 부분의 10대 과제 51개 시책 중 “미래지향적 지역개발로 동북아중심역할”이라는 과제 중 첫 번째 시책인 도청이전 입지 선정은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님께서 대구·경북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선거기간 중 이던 6월7일 당시 조해녕 대구시장 후보 및 대구·경북 정치권 인사

들과의 대구 파크호텔 회동에서 밝히신 시·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경북통합 문제에 대해 행정력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분명한 공약을 제시하셨다고 보다는 대구·경북통합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밀린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도지사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대구·경북의 통합입니까? 아니면 도청 이전의 계속 추진입니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산에 살고 있는 대구시민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달성군의 이야기와는 대조적이지만 양자 모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지역에서 일어난 대구·경산 통합추진위원회로부터 찬성서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원 후보자로서 단호히 거부했지만 지금 경 산시민 중 많은 분들이 대구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역대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직면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구와의 학군제 통합 혹은 대구·경산통합 등의 공약을 걸어 왔습니다. 물론 당선이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신 분은 물론 언급조차 하신 분은 없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느냐, 아니면 분리된 상태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중 절반이 대구로 전학하여 졸업생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경산에서 경북도민의 긍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금지가 없는 국민이 모여서 국가를 제대로 지탱하고 발전시킨 역사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구의 이런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경북 전체의 미래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산과 경북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도지사님께서서는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산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경산을 사랑하고 경북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한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대구와 경산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청 주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경북이 1, 2, 3학년 모두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위권 내에 경북이 3학년이 24개교, 2학년이 13개교, 1학년이 14개교 강원은 1, 2, 3학년 각 7개교, 반면 대구는 3학년 4개교, 2학년 2개교, 1학년 3개교에 불과합니다. 한편 경북도내 50위권 내에 들어간 학교의 분포를 보면 주요도시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 김천의 순인데 유독 50위권 내 학교 중 도내 4대 도시인 경산시에는 해당학교가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의원의 지역구는 대구와 인접해 있으며 더욱이 대구의 8학군 수성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이 10학급이라면 6학년은 5~6학급, 초등학교 8개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 3개교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본론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경산의 교육 분위기나 여건을 고려할 때 포항의 경북과학고나 구미의 경북외국어고등학교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하나만 경산에 설립한다면 3~4년 내에 전국 50위권 내에 드는 고등학교 1~2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선거기간 중 일체의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해프닝이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다면, “경산에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산에서 대구로 전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경산으로 진학하는 전국 최대의 대학이 존재하는 교육도시 경산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걸고 싶습니다.

이의근 도지사님! 그리고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산시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대구의 8학군과 경쟁할 수 있는 명문 고등학교의 육성 없이 경산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따라 인구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경산시야말로 명문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경북교육발전 4개년 계획 속에 경산에 경북 제2과학고나 제2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경산은 여러 가지 여건상 대구로 편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청소년시절 현장학습이나 야외활동 등 교실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스카우트나, 적십자, 해양소년단 등 교실에서의 수업이외에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하나의 봉사를 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단체 교사들은 방과 후 혹은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야영도 하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견학도 하고 하는데 이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조사해보니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경북도내 청소년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총 309개 초·중·고등학교 중 대부분인 240개교 77.6%의 학교에서는 이분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반면 15.2%인 47개교는 일체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7.1%인 22개교는 지급한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280여건으로 날짜로는 767일, 금액으로는 1일 1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767만원이며 원거리 출장을 감안하면 1,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소년활동 관련 선생님들의 출장비 지급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출장비를 지급 받지 못한 교사들에게 소급하여 지급이라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북부지방으로의 도청이전을 학창시설부터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굳이 이를 반대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도 않으면서 정치적, 선전적 구호로 경상북도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도민에게 혼란만 준다면 즉각 그 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경산을 대구와 통합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논의의 실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인 본 경상북도의회와 우리 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분명히 하자는 데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달성군의회에서는 대구에서 서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경북으로 돌아갈 의향이 없느냐는 어느 의회의 발언은 해프닝일지 몰라도...

본의원의 발언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짚어보자는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Ⅶ. 5분자유 발언

□ 제3차 본회의

이 정 백 의원 (농수산위원회)

상주 출신 이정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9일 새벽 상주, 예천, 안동, 영주, 문경시·군 등에 강우를 동반한 돌풍과 큰 방울토마토 만한 크기의 우박이 20분에서 90분 간을 퍼부었습니다. 과수 등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많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상주시의 경우 4개 면에 벼 280ha, 밭작물 33ha, 채소 38ha, 특작 23, 과수 181, 사과, 배, 포도, 기타 560ha에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 조치로 도, 시청 공무원 일손돕기를 실시하였으며, 도복되고 탈립된 벼에 대한 조기 수확과 과수피해가지수거 및 가공품 출하에 노력하고 도·시·군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라는 농민들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거하여 농작물 피해는 원상복구 및 구호 차원의 생계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우박 피해의 경우 결실기 고소득작물인 사과, 배, 포도 등이 피해가 많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음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허탈한 마음은 물론 보상 기준가가 농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더구나 저희 상주 지역은 '98년 게릴라성 집중호우, 지난해 초 폭설과 금년의 태풍 및 우박피해 등 연속적 재해로 인한 피해로 파산위기에 처한 농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내 예컨대 5년 내 중복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보조비율 조정 등 특별지원 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우박으로 인한 과실피해 중 사과에 대해서는 경북능금농협을 통해 가공용으로 자체 수매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배에 대해서는 수매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배에 대해서도 사과와 같이 전량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5개 품목에만 한정되고 있는데 향후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 부담에 한정하고 있는데 대해 도비와 시·군비 보조를 통하여 농어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민들이 보험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가 들고 나온 이 부분이

(작물을 들어보이면서)

화서면에 탈곡할 기력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로 벼가 탈립된 상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성 하의원(교육환경위원회)

경산 출신 김성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3개에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으로써 시·도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본의원은 정원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를 시·도에 이관한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행정부서의 권위적, 명령적, 일방적 관행과 일선 시·군의 형편을 적극 배려하고 지원해야 할 경상북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는 지난 '86년 광역시·도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래 '92년에는 다시 시·도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고, '94년에는 또 다시 환경부로 이관되었던 것을 '99년 전국 시·도지사의 공동 건의로 8년 만에 다시 광역시·도로 업무가 이관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분권화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다시금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도청 환경관리과 내에 공단관리계를 두고 정원을 증원하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다시 중앙에서 지방으로, 또 다시 중앙으로, 그리고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다시 이 업무가 2~3년 후 다시 중앙으로 이관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 지방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논리가 강해지면, 그리고 중앙으로, 중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목

소리가 높아지면 지방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온 사안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년 만에 다시 이관된 이 업무를 우리 경상북도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는 업무를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대기, 수질, 유독물 등 37개 분야 137개 공단 1만3,380개 업체에 대한 관리·단속업무를 위임하면서 86명을 정원 이체하였으며 경상북도는 6명입니다. 전국 시·도별 이관 업체 수 및 정원 이체 현황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 정원을 배치했는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1인당 관리 업체 수에 있어서 강원은 52명, 충북 54명, 전남 66명, 대전 95명, 광주 96명인데 비해 경북은 159명, 대구 163명, 경남 185명, 인천 200개 업체, 부산 242, 경기 266 등 그 편차가 최대 2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구는 필요 인원으로 42명을 요구했으나 14명을, 경상북도는 53명을 요구했으나 6명을 배치했습니다. 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 수만으로 평균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인원의 수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업무의 이양을 보면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 간의 관리업소 위임 내용을 보면 도에서는 기존 378개에서 431개소로 약간 증가한 반면에 일선 시·군은 6,309개에서 7,569개 업소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유독물질업소를 포함 166개 업소, 구미 388개소, 경산 148개소, 칠곡 13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도에 5명을 배치, 공단 관리담당을 두고 포항과 구미 국가공단에만 1명씩 배치하고 다른 시·군에는 업무만 이관함으로써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하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이양된 995개 업소

에 대한 각종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단 1명의 증원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 경상북도에 이양된 업무는 대구 지방환경청이 34명이 관리하던 것으로 경상북도에 승인된 7명으로는 위임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환경부 이체 대상 정원이 소속기관별 내역을 보면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 1명, 관리과 1명, 구미출장소 2명, 포항출장소 2명, 그리고 별도 1명으로 해서 7명입니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구미에 2명, 포항에 2명을 배치하고 100여 개 업체 이상 대상이 늘어난 경산과 칠곡에도 1명씩 우선 배치하고 나서 도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상위기관으로써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부담함을 지적하면서 일선 시·군이 도청의 부담함을 지적하는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우선 인력이라도 배치해 줘야 업무 인수 등 일이라도 할 것 아니냐며 예산도, 인원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업무만 이양하는 중앙정부는 물론 관리하기 편한 1~2종만 경북도청이 관리하고 3종은 일선 시·군에 이관하여 관리대상업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인원은 5명을 증원한 경상북도 역시 상부기관의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을 떨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위임에 따른 인력보장을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인력 증원시 위임업소수가 많은 시·군부터 우선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역시 우선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통해 조속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으나 조속한 시일이라는 것이 언제가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난 '97년 대기수질기본부과금 부과업무 신설, '99년 환경부로부터 대기자동측정망 12개소 운영위임, 소규모지정폐기물관리신설, 복지부로부터 감염성폐기물관리업무이관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추가 소요인력은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원과 장비의 충분한 지원 없이 업무만 이양하는 것

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이양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이양된 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어쨌든 잘 안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위법에 의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본의원 역시 명쾌한 답을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오히려 인력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업무만 이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나마 6명이라도 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악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1명의 경찰관이 1,000명의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000명을 더 보호하라고 하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책임까지 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문제가 생겨서 징계나 파면의 조치를 한다면 그것을 용인한 법은 악법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개정배경에 악법 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결국은 중앙부처의 횡포에 동조한 것이며 경상북도의회가 이를 묵과시켜 통과시킨다면 이는 집행부의 시녀로서 스스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내의 환경업무 위임에 따른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되었습시다마는 저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존중하되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이를 유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는 일선 시·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번 경상북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유보를 제안하는 본의원의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3건
- 예결특위종합심사 : 2건

□ 조례안 : 3건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예결특위종합심사 : 2건

-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0. 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중 "3,436"을 "3,447"로 하고, 제1호중 "1,603"을 "1,61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0. 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경상북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각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

제3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로 한다.)”로 하며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동조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제6조중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0. 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I.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2년 7월 6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2년 9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17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 9.30)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 1)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Ⅲ.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괄

- 200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조 5,609억 2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6,362억 6천 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3,023억 5천 5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3,339억 1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655억 8천만원, 사고이월액은 241억 3천 4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54억 9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80억 7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107억 8백만원임.
-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이 2조 1,317억 6천 4백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53억 2천 1백만원이 감소한 2조 1,264억 4천 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9,727억 6천 5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291억 5천 6백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806억 6천 6백만원이 늘어난 5,098억 2천 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95억 9천만원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관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예 산 현 액		2,560,920	100%	2,131,764	100%	429,156	100%
세 입 결 산 액(A)		2,636,265	102.9	2,126,443	99.8	509,822	118.8
세 출 결 산 액(B)		2,302,355	90.0	1,972,765	92.5	329,590	76.8
잉 여 금 (A-B)		333,910	13.0	153,678	7.2	180,232	42.0
잉 여 금 내 역	명 시 이 월	65,580	-	63,276	-	2,304	-
	사 고 이 월	24,134	-	23,389	-	745	-
	계 속 비 이 월	5,409	-	5,409	-	-	-
	국고보조금잔액	28,079	-	26,743	-	1,336	-
	순세계잉여금	210,708	-	34,861	-	175,847	-

나. 세입결산 현황

1) 총괄

-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2조 6,362억 6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5,609억 2천만원보다 753억 4천 5백만원(2%)이 증가하였음.
- 그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2조 1,264억 4천 3백만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 5,098억 2천 2백만원임.
- 2001년도 미수납액은 496억 9천 8백만원으로 29억 9천 3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67억 5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손 처분	익년도 이월	
합계	2,560,920	2,685,963	2,636,265	49,698	2,993	46,705	98
일반회계	2,131,764	2,175,053	2,126,443	48,610	2,990	45,620	98
특별회계	429,156	510,910	509,822	1,088	3	1,085	100
공기업특별회계	241,430	316,670	316,670	-	-	-	100
기타특별회계	187,726	194,240	193,152	1,088	3	1,085	99

※ 예산현액(2,560,920) = 예산액(2,462,880) + 전년도이월액(98,040)

2)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1,264억 4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1,317억 6천 4백만원보다 53억 2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그 내역은 지방세 4,914억 4천 2백만원, 세외수입 1,857억 3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3,736억 8천 1백만원, 지방양여금 2,308억 8천 2백만원, 보조금 8,447억 7백만원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86억 1천만원으로 29억 9천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456억 2천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 처분	익년도 이월	C/A	C/B
합 계	2,131,764	2,175,053	2,126,443	48,610	2,990	45,620	99.7	97.8
지 방 세	470,000	538,661	491,442	47,219	2,987	44,232	104.6	91.2
세 외 수 입	185,786	187,122	185,731	1,391	3	1,388	99.9	99.3
지방교부세	386,984	373,681	373,681	-	-	-	96.6	100
지방양여금	237,990	230,882	230,882	-	-	-	97.0	100
보 조 금	851,004	844,707	844,707	-	-	-	99.3	100
지 방 채	-	-	-	-	-	-	-	-

※ 예산현액(2,131,764) = 예산액(2,037,470) + 전년도이월액(94,294)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5,098억 2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291억 5천 6백만원보다 806억 6천 6백만원(18.8%)이 증가되었음.
-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3,166억 7천만원, 의료보호기금 1,552억 3천 3백만원, 치수사업 333억 3천 4백만원, 경도대학 운영특별회계가 45억 8천 5백만원임.
-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10억 8천 8백만원으로 3백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10억 8천 5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음.

-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 처분	익년도 이월	C/A	C/B
합 계	429,156	510,910	509,822	1,088	3	1,085	118.8	99.8
지역개발기금	241,430	316,670	316,670	-	-	-	131.2	100
의료보호기금	155,186	155,243	155,233	10	-	10	100	100
치 수 사 업	27,958	34,412	33,334	1,078	3	1,075	119.2	96.9
경 도 대 학	4,582	4,585	4,585	-	-	-	100	100

※ 예산현액(429,156) = 예산액(425,410) + 전년도이월액(3,746)

다. 세출결산 현황

1) 총 괄

-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결산액은 2조 3,023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5,609억 2천만원 대비 89.9%가 지출
되었음.
-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1조 9,727억 6천 5백만원, 특별회계는
3,295억 9천만원이며, 집행잔액 2,585억 6천 5백만원중 다음
년도로 951억 2천 3백만원을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634억
4천 2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잔액)	지출율 (B/A)%
합 계	2,462,880	2,560,920	2,302,355	95,123	163,442	89.9
일반회계	2,037,470	2,131,764	1,972,765	92,074	66,925	92.5
특별회계	425,410	429,156	329,590	3,049	96,517	76.8

2) 일반회계

-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9,727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1,317억 6천 4백만원 대비 92.5%를 집행하였음.
- 결산액 내역은 일반행정비 2,535억 1천 2백만원, 사회개발비 6,890억 1천 3백만원, 경제개발비 7,746억 7천 4백만원, 민방위비 742억원, 지원및기타경비 1,813억 6천 6백만원임.
- 집행잔액 1,589억 9천 9백만원중 920억 7천 4백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669억 2천 5백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2,037,470	2,131,764	1,972,765	92,074	66,925	92.5	4.3	3.1
일반행정비	257,507	260,683	253,512	5,575	1,596	97.2	2.1	0.6
사회개발비	716,313	717,350	689,013	13,428	14,909	96.0	1.9	2.1
경제개발비	769,605	870,698	774,674	70,662	25,362	89.0	8.9	2.9
민 방 위 비	76,027	77,406	74,200	2,409	797	95.9	3.1	1.0
지원및기타경비	218,018	205,627	181,366	-	24,261	88.2	-	11.8

3) 특별회계

-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291억 5천 6백만원 대비 76.8%인 3,295억 9천만원으로,
-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487억 2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36억 7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34억 4천 7백만원, 경도대학운영특별회계 37억 7천 1백만원임.
- 집행잔액 995억 6천 6백만원중 30억 4천 9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965억 1천 7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특별회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425,410	429,156	329,590	3,049	96,517	76.8	0.7	22.5
지역개발기금	241,430	241,430	148,702	-	92,728	61.6	-	38.4
의료보호기금	155,186	155,186	153,670	-	1,515	99.0	-	1.0
치 수 사 업	24,712	27,958	23,447	2,969	1,543	83.9	10.6	5.5
경도대학운영	4,082	4,582	3,771	80	731	82.3	1.7	16.0

4)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

- 세출예산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622억 6천 7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8천만원, 예산집행 잔액 434억 3천 1백만원, 예비비 543억 6천 1백만원, 기타 예산절감 등 11억 3백만원임.

-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유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63,442	66,925	96,517
· 계획변경 취소	62,267	180	62,087
· 집행사유 미발생	2,280	365	1,915
· 예산절감	1,103	1,092	11
· 예산집행 잔액	2,475	1,651	824
· 보조금집행 잔액	40,956	39,407	1,549
· 예비비	54,361	24,230	30,131

라. 예산이용 · 전용 · 이체사용 현황

(1) 예산이용 · 전용사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이체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이체금액	이체일	사 유
농기계기능훈련 및 영농교육	205	'01.4.8	직제개편(정원일부조정)으로 공무원교육원 '농기계 기능훈련 및 영농 교육'이 농업 기술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체 (경상북도규칙 제2411호)

마. 예비비 결산현황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5억 9천 4백만원중 123억 9천 1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4%인 104억 7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 2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8억 9천 4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예비비지출 주요 내역은

- 1.7~1.9 및 1.20 발생한 폭풍설피해복구비 11억 3백만원
- 한해우심지역 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 59억 3천 6백만원
-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 및 6.13 선거홍보 등 5억 7천 3백만원
- 2000 수해복구추가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4억 2천 5백만원
- 6.23~6.25 및 7.14~15 호우피해복구비 24억 1천 8백만원
- 9.9 집중호우피해복구비 등에 2천만원 지출되었음.

-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일반회계	36,594	12,391	10,475	22	1,894	

바. 채무부담 결산현황

-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외 5건에 311억 2천 5백만원임.

- 채무부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채무부담 행 위 액	상환조건	채무부담행위사유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31,125			31,12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 시 행분)	6,533	2002년 일시상환	도비부담 재원부족	6,533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도 시 행분)	8,892	"	"	8,892
지방도 양여금사업	3,039	"	"	3,039
지방도 양여금사업 (시.군 시 행분)	1,266	"	"	1,266
지방도 양여금사업	7,928	"	"	7,928
지방도 양여금사업	3,467	"	"	3,467

사. 이월비 결산현황

1) 총괄

-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46건에 총 951억원으로 명시이월 28건 656억원, 사고이월 16건 241억원, 계속비이월 2건에 54억원임

- 세출예산의 이월비 현황 -

구분	건수	이월액(억원)	내용(억원)
총계	46건	951	
일반회계	43건	921	
명시이월	26	633	•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96 • 백안~와촌간 도로확포장공사 96 • 감척어선 보상금 47 • 정보화시범마을정보콘텐츠구축사업 32 •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증축 등 262
사고이월	15	234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2 •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56 • 지방도 사업 등 106
계속비이월	2	54	• 북부지역합동청사건립 13 • 산림과학박물관건립 41
특별회계	3건	30	
명시이월	2	23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22 • 경도대학 종합문화관 건립 1
사고이월	1	7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

2)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다음년도 이월액은 43건 921억여원으로
 - 명시이월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비 등 26건에 633억원이고,
 - 사고이월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15건에 234억원이며,
 - 계속비이월은 산림과학박물관건립 등 2건으로 54억원임.

※ 일반회계 이월사업 조서 : 보조자료 참고

- 세출예산 이월액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율 (%)	비 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131,764	92,074	63,276	23,389	5,409	4.3	
일 반 행 정 비	260,683	5,575	4,307	250	1,018	2.1	
사 회 개 발 비	717,350	13,428	13,030	398	-	1.9	
경 제 개 발 비	870,698	70,662	43,703	22,568	4,391	8.1	
민 방 위 비	77,406	2,409	2,236	173	-	3.1	
지원및기타경비	205,627	-	-	-	-	-	

3)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액은 3건에 30억 4천 9백만원으로
- 그 내역을 보면
 - 명시이월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3억 4백만원, 경도대학 종합문화관 건립 8천만원 등이고
 - 사고이월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7억 4천 5백만원임

※ 특별회계 이월사업 조서 : 보조자료 참고

- 세출예산 이월액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율 (%)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429,156	3,049	2,304	745	-	0.7	
지역개발기금	241,430	-	-	-	-	-	
의료보호기금	155,186	-	-	-	-	-	
치수사업	27,958	2,969	2,224	745	-	10.6	
경도대학운영	4,582	80	80	-	-	1.7	

2. 세입세출외 결산현황

가. 기금 결산현황

- 2001년도말 현재 경상북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095억 3천 1백만원보다 2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2,116억 6천 8백만원임.

- 적립기금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	금년도(2001)	증 감	비 고
17종	209,531	211,668	2,137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341	1,510	169	총 무 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312	4,344	32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기금	10,296	12,011	1,715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3,493	3,560	67	"
농어촌진흥기금	35,209	46,157	10,948	농 정 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14,098	98,920	△15,178	중소기업진흥과
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	1,367	1,966	599	경제노동과
식품진흥기금	14,507	14,141	△366	보건위생과
포플라장학기금	224	220	△4	산 립 과
사회복지기금	5,111	5,211	100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11,840	12,934	1,094	"
장애인복지기금	500	962	462	"
노인복지기금	2,482	2,454	△28	가정복지과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22	1,527	5	농업기술원
여성발전기금	516	1,059	543	여성정책과
재해대책기금	2,156	3,505	1,349	치수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557	1,187	630	"

나.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

1) 채 권

- 2001년도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5,75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38억원(12.8%) 감소한 5,019억원임.
- 채권의 종류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채권 현재액 내역 -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	금년도(2001)	증 감	비고
계		575,689	501,867	△73,822	
일 반 회 계		103,089	99,967	△3,122	
	농어촌주택개량 용자	102,007	98,762	△3,245	
	우수농고생지원 용자	202	203	1	
	서울사무소 임차	268	320	52	
	시마네현 APT 임차	50	50		
	소방서 관사 임차	382	382		
	관사임차	130	150	20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소)	50	50		
	일성콘도미니엄 회원권		50	50	
특 별 회 계		472,600	401,900	△70,700	
	지역개발기금	472,600	401,900	△70,700	

2) 채 무

- 2001년도말 현재 경상북도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8,072억여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715억원보다 643억원(7.4%)이 줄었음.
- 채무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388억원, 특별회계는 4,684억원이고 채무 종류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채무 종류별 현황 -

(단위 : 억 원)

종 류	전년도	금년도(2001)	증 감	비 고
계	8,715	8,072	△643	
일 반 회 계	4,097	3,388	△709	
정부자금 차입	1,685	1,609	△76	재정경제부
지역개발기금 차입	1,778	1,424	△354	도
청사정비기금 차입	51	44	△7	지방재정공제회
채무부담행위	583	311	△272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특 별 회 계	4,618	4,684	66	
지역개발기금	4,618	4,684	66	

다. 공유재산 결산현황

1) 공유재산

-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39억여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818억원보다 121억원이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합 계	481,766	12,087	18,837	6,750	493,853
행정재산	378,292	18,280	54,645	211	396,572
보존재산	31,330	0	0	0	31,330
잡종재산	72,144	△6,193	11,886	6,539	65,951

-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

(단위 : 억원)

종류별	전년도(2000)		금년도(2001)		증 감		비고
	면적및수량	가 격	면적및수량	가 격	면적및수량	가 격	
계		4,818		4,939		121	
토 지	169백만㎡	4,188	169	4,245		57	
건 물	525동	468	547	532	22동	64	
임 목 축	546천㎡	95	546	95			
공 작 물		9		9			
선 박	2척	21	2	21			
항 공 기	1대	25	1	25			
유가증권	247,248주	12	247,248	12			

※ 증감내용 : 토지 57억원, 건물 64억원

- 도로확.포장 편입(624필지) 101, 하천개.보수편입(283필지) 13, 잡종지 매각(21필지) △34, 기타 △23
- 구미, 선산소방파출소 등 청사 22동 신증축 62, 기타 2

2) 물 품

- 200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66종에 480억 4천 6백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54억 8천 7백만원보다 25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금액/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765	45,487	1,001	5,667	478	3,108	523	2,559	7,288	48,046
구 매			711	4,104	138	1,081	573	3,023		
관 리 전 환			290	1,563	340	2,027	△70	△464		
가격개정 및 감가상각			-	-	-	-	-	-		
기 타			-	-	-	-	-	-		

※ 증가내역

- 업무용 : 4억원 증가(지프형승용차 8대, 전자복사기 15대 등)
- 사업용 : 21억원 증가(굴삭기 3대, 수질측정기 1대 등)

라. 금고결산 현황

1) 일반 및 특별회계

- 2001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의 잔액은 1,644억 4천 2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 33억 4천 2백만원이고 예치금이 1,611억원임

-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2002년 이 입	잔 액		
				계	공공예금	예치금
합 계	2,319,595	2,153,653	1,500	164,442	3,342	161,100
일 반 회 계	2,126,443	1,972,765	1,500	152,178	278	151,900
특 별 회 계	193,152	180,888	0	12,264	3,064	9,200
의료보호기금운영	155,233	153,670	0	1,563	1,563	0
치 수 사 업	33,334	23,447	0	9,887	687	9,200
경도대학 운영	4,585	3,771	0	814	814	0

2) 세입세출외 현금

- 2001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의 잔액은 2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7천 6백만원보다 1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세출외 현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 말 잔 액	비 고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276	16	7,666	7,650	292	
부 담 금	14	17	54	37	31	
보 증 금	259	△ 9	3,544	3,553	250	
보 관 금	3	8	4,068	4,060	11	
기 타	691	△688	3,133	3,821	3	

IV.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V. 검토의견

1. 총괄부문

□ 결산규모

- 200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2조 5,609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1,010억 4천 7백만원 보다 21.9%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3%인 2조 6,362억 6천 5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0%인 2조 3,023억 5천 5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3,339억 1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 명시이월액은 655억 8천만원, 사고이월액 241억 3천 4백만원,
- 계속비이월액은 54억 9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0억 7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107억 8백만원임.

□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추이를 보면 '98~2001년까지 세입 결산액은 연평균 9.8% 증가했고, 세출 결산액은 6.5% 증가했음.

이와 같이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뚜렷하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 재정자립도도 2000년도 29.2%, 2001년도에 31.8%로서 다소 나아졌으나 제도적·구조적으로 지방재정수입의 중앙 정부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고 하겠음.
- 특히,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혜택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져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 자립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데, 현행 지방세 체계는 너무 복잡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므로
- 조세 통·폐합 등 지방세체계의 단순화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를 통한 경쟁을 유발하는 법적·제도적인 여건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일반회계 연도별 재정력 -

구 분	'98	'99	2000	2001
재 정 자 립 도	24.0%	31.2%	29.2%	31.8%
재 정 력 지 수	0.57	0.65	0.61	0.42
투 자 비 비 율	85%	80%	82%	76%

- 세입세출 연도별 결산추이 -

(단위:백만원)

구 분		'98	'99	2000	2001	평균신장율 (%)
세 입 액 (A)	합 계	2,036,240	2,038,176	2,163,877	2,636,265	9.8
	일반회계	1,777,970	1,720,310	1,761,024	2,126,443	-
	특별회계	258,270	317,866	402,853	509,822	-
	공 기 업	159,524	200,288	263,375	316,670	-
	기 타	98,746	117,578	139,478	193,152	-
세 출 액 (B)	합 계	1,925,669	1,857,056	1,954,290	2,302,355	6.5
	일반회계	1,680,706	1,590,774	1,641,836	1,972,765	-
	특별회계	244,963	266,282	312,454	329,590	-
	공 기 업	153,200	156,219	183,655	148,702	-
	기 타	91,763	110,063	128,799	180,888	-
수 지 (A-B)		110,571 (5.7%)	181,120 (9.8%)	209,587 (9.7%)	333,910 (12.7%)	-

2. 세입부문

□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0.8% 증가한 2조 1,264억 4천 3백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4,492억 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771억 7천 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1%로 전년도 보다 2%정도 늘어났음.
- 그 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금액면에서 꾸준히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 세원발굴과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익사업을 효율화하는 방안 강구와 아울러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수익자부담금의 활용방안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의지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되며
 -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재정관리 제도하에서 교부세 제도의 경우, 비효율적인 자치단체가 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 보다는 중앙정부에 적극 매달려야 하는 불합리함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됨

□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세는 부과액은 5,387억원 대비 8.8% 줄어든 4,915억원을 징수하고 472억원은 미수납 하였음.
이중 징수유예 5천만원, 채무자 거소불명 53억원, 무재산, 고질적체납 등이 166억원, 기타 소송계류 및 압류와 관련하여 114억원 등으로서 부과액에 비하여 체납액이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임.
- 이는 IMF 경제난의 여파로 기업체의 부도·폐업에 따른 실업을 증가 등에 의하여 체납세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체납율로 볼 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채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체납자 등에 의한 체납액은 재산추적 조사와 아울러 강제징수·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고,
- 재정수요의 조절과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기업가적 입장에서 충실한 경영관리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주민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A)	징 수 액 (B)	미 수 납 액			체납율(%) (C/A)
			계(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98년	315,761	282,675	33,086	1,886	31,200	10.5
'99년	384,659	347,168	37,491	2,032	35,459	10.8
2000년	373,945	329,670	44,275	5,076	39,199	11.8
2001년	538,661	491,442	47,219	2,987	44,232	8.8

- 지방세 미수납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징수유예	채 무 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 압 류 중	기 타
지 방 세	44,232 (100%)	48 (0.1)	5,304 (12.0)	9,230 (20.9)	7,346 (16.6)	11,388 (25.7)	10,916 (24.7)

3. 세출부문

□ 세출예산 불용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결산결과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1,634억 4천 2백만원으로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취소 622억 6천 7백만원 (38.1%),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8천만원(1.4%), 예산절감 11억 3백만원 (0.7%), 예산집행잔액이 24억 7천 5백만원 (1.5%), 보조금 잔액 409억 5천 6백만원(25%), 예비비 잔액 543억 6천 1백만원(33.3%)임.
- 불용액은 다음년도 예산에 용이하게 쓰여지고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음
- 이는 현 점증주의의 품목별 예산편성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예산제도 하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평가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예산집행에 대한 객관적이며 엄격한 평가제도의 부재로 말미암아 책임행정의 구현이 어려우며, 따온 예산을 그대로 남김없이 쓰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만연되어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사 유 별					
			계 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2,560,920	163,442 (100%)	62,257 (38.1)	2,280 (1.4)	1,103 (0.7)	2,475 (1.5)	40,956 (25.0)	54,361 (33.3)
일반회계	2,131,764	66,925	180	365	1,092	1,651	39,407	24,230
특별회계	429,156	96,517	62,087	1,915	11	824	1,549	30,131

□ 예산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다음년도 이월액은 46건에 총 951억 원으로서

-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26건 633억 원 ▲사고이월 15건 234억 원

▲계속비이월 2건 54억 원이고

-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건 23억 원 ▲사고이월 1건 7억 원임

○ 특히 명시이월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내 완공 타당성과 사업기간을 고려, 연초에 우선 발주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이월예산을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의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음.
- 경상북도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등
17종(2000년:17종)으로서 2001년도에 2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2,116억 6천 8백만원에 달하지만, 농어촌 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일부기금에 편중되어 있고, 포플라장학
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은 적립액이 적어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 지출액은 적립액과 대비하면 40%가
지출되어 운용은 되고 있으나,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지출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기금설치·운용 목적에 부합
되는지 우려되며 향후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기금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B)	비 고
		계 (C-D)	수납액 (C)	지출액 (D)		
적립기금(17종)	209,531	2,137	84,999	82,862	211,668	

□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 예비비는 회계년도중 재해피해 응급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긴급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 1.7~1.9 및 1.20 발생한 폭풍설피해복구비 11억 300만원
 - 한해우심지역 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 59억 3,600만원
 -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 및 6.13 선거홍보 등 5억 7,300만원
 - 2000 수해복구추가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4억 2,500만원
 - 6.23~6.25 및 7.14~15 호우피해복구비 24억 1,800만원
 - 9.9 집중호우피해복구비 등에 2,000만원 지출되었음.

-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36,594	12,391	10,475	22	1,894	
일반회계	36,594	12,391	10,475	22	1,894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I.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2년 7월 4일,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9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17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 9. 30)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Ⅲ.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괄

-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30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1조 7,827억 4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조 7,939억 5,900만원으로서
 - 의존수입은 1조 5,990억 4,100만원으로서 89.1%
 - 자체수입이 1,949억 1,800만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1조 5,827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8% 지출되었음.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1,782,704	1,793,959	1,582,768	211,191	○ 순세계잉여금 : 75,216 ○ 이월금 : 135,975 • 명시이월 : 71,059 • 사고이월 : 64,916

나. 세 입

-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7,827억 400만원보다 112억 5,500만원이 증가한 1조 7,939억 5,900만원임.
- 불납결손액 6,000만원은
 - 입학금 및 수업료 4,600만원 잡수입 등 1,400만원이며,
- 미수납액 1억 1,500만원의 내역은
 - 재산수입 3,2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1,100만원, 잡수입 7,200만원임.

< 세입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관 별	예산현액	정 결 정 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1,782,704	1,794,134	1,793,959	60	115	100.6
의 존 수 입	소 계	1,586,098	1,599,041	1,599,041			10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17,435	1,217,435	1,217,435			100.0
	지방교육양여금	208,529	215,046	215,046			103.1
	국고지원금	12,931	12,931	12,931			100.0
	법정전입금	143,512	149,912	149,912			104.4
	비법정전입금	665	665	665			100.0
	주민(기관등)부담금	1,212	1,238	1,238			102.1
	기타 지원금	1,814	1,814	1,814			100.0
자 체 수 입	소 계	196,606	195,093	194,918	60	115	99.1
	재 산 수 입	9,430	11,467	11,434		32	121.2
	입학금및수업료	44,258	44,427	44,370	46	11	100.2
	사용료및수수료	618	887	887			143.5
	잡 수 입	8,192	9,313	9,228	14	72	112.6
	이 월 금	128,999	128,999	128,999			100.0
	지방교육채	5,109					

○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 의존수입은 1조 5,990억 4,1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2,174억 3,5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2,150억 4,600만원, 국고지원금 129억 3,100만원, 전입금 1,505억 7,700만원, 주민부담금 등 30억 5,200만원 등이며,
- 자체수입은 1,949억 1,800만원으로
재산수입 114억 3,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443억 7,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8억 8,700만원, 잡수입 92억 2,800만원, 이월금 1,289억 9,900만원 등임.

<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 >

(단위:백만원)

의 존 수 입					
소 계	지방교육재정 교 부 금	지방교육 양 여 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주민부담금등
1,599,041	1,217,435	215,046	12,931	150,577	3,052

(단위:백만원)

자 체 수 입					
소 계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 업 료	사용료 및 수 수 료	잡수입	이월금
194,918	11,434	44,370	887	9,228	128,999

다. 세 출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5,827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30억 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7,827억 400만원보다 1,999억 3,600만원이 적게 지출 되었음.
- 1,999억 3,600만원중 1,359억 7,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639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세출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관 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
합 계	1,699,617	83,087	1,782,704	1,582,768	135,975	63,961	3.6
유 치 원	14,620		14,620	14,489	81	50	0.3
초등학교	223,971	37,047	261,018	213,528	27,451	20,039	7.6
중 학 교	187,463	17,498	204,961	161,576	39,513	3,872	1.8
고등학교	304,527	23,206	327,733	262,495	57,867	7,371	2.2
특수학교	15,925	229	16,154	16,140		14	0.1
평생교육	2,931		2,931	2,846		85	2.9
급여관리	781,883		781,883	770,631		11,252	1.4
복지후생	107,277		107,277	92,471		14,806	13.8
교육위원회	489		489	473		16	3.2
교육청운영	14,176	276	14,452	12,882	890	680	4.7
지역교육청	16,919	2,454	19,373	12,956	5,099	1,318	6.8
교육지원기관	16,380	2,377	18,757	13,009	5,074	674	3.5
지방채상환	9,253		9,253	9,221		32	0.3
제지출금	51		51	51			
예 비 비	3,752		3,752			3,752	100

○ 불용액 639억 6,1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175억 9,3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1,500만원, 예산절감 22억 6,8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30억,
집행잔액 210억 8,500만원임

< 불용액 내역 >

(단위:백만원)

성질별	예산액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취소	정원 및 호봉미달 운영	예산 절감	지급사 유미발생	집행 잔액	기타
계	1,782,704	63,961	17,593	15	2,268	23,000	21,085	
인건비	618,173	6,656	433			1	6,222	
물건비	215,794	7,278	91		2,111	113	4,963	
경상이전	582,375	16,107	81	15	1	15,127	883	
자본지출 경비	362,559	30,168	16,988		156	4,007	9,017	
예비비 및 기타	3,803	3,752				3,752		

라. 예비비 : 해당없음

마. 예산이용, 이체 및 전용 : 해당없음

바. 계속비 : 해당없음

사. 이월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9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중 명시이월은 59건에 710억 5,900만원이고,
 - 사고이월은 56건에 649억 1,600만원임

< 이월비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율 (%)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교육비특별회계	1,782,704	135,975	71,059	64,916	7.6

2. 세입세출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 채 권

- 2001년도말 채권액은 977억 5,3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875억 7,100만원보다 10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원인은 국고대여장학금 102억 1,400만원과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전세권 5,0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 교사주택 전세권 6,000만원, 재산임대료 2,200만원 등이 감소되었음.

〈 채 권 결 산 현 황 〉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연도중 증감액		당 해 연도말	증 · 감
		증	감		
계	87,571	14,980	4,798	97,753	10,182
원 어 민 영 어 교사주택 전세권	177		60	117	△60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 전세권		50		50	50
국 고 대 여 장 학 금	87,257	14,886	4,672	97,471	10,214
재산 임대료	123	33	52	104	△19
수 업 료	13	11	13	11	△2
지 체 상 금	1		1	0	△1

2) 채 무

- 채무액은 전년도말 1,750억 400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차입금 내역은 교원명예퇴직수당 1,305억 8,000만원
학교시설비 122억 7,400만원, 소규모학교통폐합지원비
321억 5,000만원임.

〈 채 무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 입 금	175,004	-	-	-	175,004	

나. 재 산

1) 공유 재산

- 2001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5,531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4,315억 2,200만원보다 1,21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 4,970억 7,700만원, 잡종재산 560억 7,400만원임

< 공유재산 현황 >

(단위: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합 계	2,431,522	121,629	188,617	66,988	2,553,151
행정 재산	2,368,312	128,765	158,691	29,926	2,497,077
잡종재산	63,210	△ 7,136	29,926	37,062	56,074

2) 물 품

- 200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168억 1,000만원보다 176억 800만원이 증가한 1,344억 1,800만원임

< 물품 현황 >

(단위:수량/점, 금액/백만원)

품 종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 재 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전기기계 등10종	22,191	116,810	4,895	21,384	806	3,776	26,280	134,418

IV.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V. 검토의견

1. 총괄 부문

□ 200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30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1조 7,827억 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1조 7,941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7,939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억 7,5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8%인 1조 5,827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2,111억 9,100만원으로 이월금 1,359억 7,500만원, 나머지 752억 1,6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하였음.

2. 세입부문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의 89.1%를 차지하고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10.1%에 불과해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의 빈약함을 나타내고 있음
-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와의 사전협의 및 협조체제를 통하여 법정전입금의 확대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사립학교 수업료 현실화 등 자체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매년 반복되는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 등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재원별 세입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비 고
합 계	1,365,893 (100%)	1,293,914 (100%)	1,459,762 (100%)	1,589,135 (100%)	
의존수입	1,226,176 (89.8%)	1,187,515 (91.8%)	1,203,466 (82.4%)	1,284,082 (80.8%)	
자체수입	139,717 (10.2%)	106,399 (8.2%)	256,296 (17.6%)	305,053 (19.2%)	

3. 세출부문

□ 이월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월액은 주로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는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 이월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중앙지원금의 배정 지연이나 사업발주 시기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2001년도 이월액 1,359억 7,500만원중 명시이월비 710억 5,900만원(52%), 사고이월비는 649억 1,600만원(48%)으로 전년도의 830억 8,700만원에 비해 63.6% 증액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이 7.6%로 과다 발생하였음
- 이월비의 과다발생은 대부분 정리 추경예산에서 계상된 것으로 이월비의 대부분인 시설사업비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야 하겠으며,
- 향후 예산편성은 단위사업의 성격,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결산결과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639억 6,100만원으로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75억 9,3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30억, 예산절감 등 22억 8,300만원, 집행잔액 210억 8,500만원으로, 2000년도 불용액 456억 3,100만원에 비해 40%정도 증가되었음.
- 인건비와 물건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임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안이한 예산 소요판단에도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및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적정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 으며
- 경상이전에서 지급사유 미발생분 151억원과 자본지출경비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09억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의 실현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될 소지가 있는 예산은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추경시 삭감·조정하여 타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사업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정활동보고서(제172회 임시회)

2002. 10 인쇄 / 2002. 10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비매품〉